2014 평화재단 창립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새로운 100년을 위한 출발,
새로운 통일을 위한 준비
통일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프로그램

13:00	접 수	
13:30	개 회	
13:35	여는 말	**김형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
13:40	사 회	**최상용** 전 주일대사, 서울신학대학 석좌교수
13:50	발표 1	**통일로 가는 길: 한국 사회의 통일 준비** **조 민** 평화재단 교육원 원장, 통일연구원 연구본부장
14:10	토론 1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정책실장
	토론 2	**성경륭**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4:30	발표자, 토론자 질의응답	
14:40	발표 2	**통일로 가는 길: 북한의 통일 준비**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15:00	토론 3	**김영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 4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15:20	발표자, 토론자 질의응답	
15:30	휴식	
15:50	발표 3	**통일로 가는 길: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 **이 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6:10	토론 5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6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6:30	발표자, 토론자 질의응답	
16:40	전체토론	
17:20	닫는 말	**법륜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17:30	폐 회	

인사말

평화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열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화재단에서는 매년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굵직굵직한 화두를 던져왔습니다. 때로는 우리 사회의 혁신방향을 제시하며 가감 없이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화해와 상생을 위해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며 현명한 전략을 찾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통일 패러다임'이라는 화두를 던진다는 점에서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통일 패러다임의 전환은커녕 "과연 우리에게 통일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있었느냐"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분단을 안정적이고 평화적으로 관리하는데 몰두해왔을 뿐, 통일 이후를 내다보며 실질적인 대비는 등한시 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남한 사회가 '저' 북한 사회와 결합한다는 것이 과연 '행복'하겠느냐는 질문도 마땅히 제기되어야 합니다. 통일을 북한의 식민지화와 동일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가 먼저 모범국가로 바뀌어야 한다는 성찰이 따라야 합니다.

북한도 최소한 주민들이 먹고 살 수는 있도록 해주고, 스스로가 정한 법과 규범은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환경과 관련해서도 미중의 세력변화 속에 우리가 어떻게 통일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통일코리아는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믿음직한 판단이 나와 줘야 합니다. 이처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는 노정이 바로 이번 심포지엄에 담겨있습니다.

감히 약속드리건대, 이것이 시작입니다. 통일패러다임을 구축해가려는 작은 몸짓, 그것을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에서 한 걸음 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모두 오셔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차례

004 모시는 글

008 약력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011 발표 1 통일로 가는 길: 한국 사회의 통일 준비
조 민 (평화재단 교육원 원장, 통일연구원 연구본부장)

043 발표 2 통일로 가는 길: 북한의 통일 준비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057 발표 3 통일로 가는 길: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
이 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075 토론 1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63 토론 2 성경륭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089 토론 3 김영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093 토론 4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097 토론 5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01 토론 6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약력

사회 **최 상 용**

현 서울신학대학교 석좌교수
일본 호세이(法政)대학교 객원교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전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부 통일고문
주일본국 특명전권대사
한국정치학회 회장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발표 **조 민**

현 통일연구원 연구본부장
평화재단 평화교육원 원장
코리아글로버(KG) 이사

전 민족통일학회 부회장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초대연구이사

발표 **윤 여 상**

현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통일부 정책평가위원/정책자문위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문위원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위원

발표 **이 근**

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부원장
싱크탱크 미래지 원장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토론 **정 낙 근**

현 (재)여의도연구원 정책실장(수석연구위원)
(재)여의도연구원 통일연구센터 기획실장
민화협 정책위원
전 (사)안민정책포럼 사무총장
(재)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

토론 **성 경 륭**

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전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참여정부 대통령 정책실장
한림대 사회과학대학장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연구위원장

토론 **김 영 수**

현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전 서강대 부총장

토론 **이 영 훈**

현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차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
캠브리지대학교 동양학연구소(영국) 초청연구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 **조 한 범**

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토론 **이 희 옥**

현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성균중국연구소 소장
중국대학원장
전 현대중국학회 회장
중국정치연구회 운영위원장

발 표 1

통일로 가는 길: 한국 사회의 통일 준비

조민 평화재단 교육원 원장, 통일연구원 연구본부장

Ⅰ. 한반도 통일시대의 새벽
Ⅱ. 통일 필요성과 통일준비
Ⅲ. 통일코리아(Ⅰ): ‘한반도 연방제’프로젝트
Ⅳ. 통일코리아(Ⅱ): ‘사회적 국가’와 협력경제(협력사회)체제
Ⅴ. 에필로그

Ⅰ. 한반도 통일시대의 새벽

한반도는 지금 분단시대의 황혼을 뒤로 하면서 바야흐로 통일시대의 여명을 맞이하고 있다. 21세기 문명사적 흐름과 세계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 통일은 이미 가시권에 들어왔다. 70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한반도의 분단구조는 언제라도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2030년 즈음에 한반도 통일 상황을 상정한다면, 지금 통일준비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 발전과 민족 미래를 위해서 이제 분단 프레임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평화와 통일은 불가분의 관계이나, 지금까지 한반도의 평화는 한민족의 통일에 앞서왔다. 이에 대북정책은 분단의 평화적 관리 즉, ‘분단평화’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냉전체제 붕괴 이후 지금까지 4반세기 동안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과 갈등의 진원지가 되었으며, 그에 따라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핵개발과 생존전략, 남북

한 국력 격차의 심화·확대, 그리고 동북아 역학구도의 변화로 인한 국제정세의 불안정 등 여러 요인은 한반도의 분단을 전제한 공고한 평화의 구축을 어렵게 만들었다. 서로 떨어질 수 없으면서도 불균등·불균형한 두 개의 분단국가의 지속을 전제한 분단평화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분단 프레임 해체: 분단평화에서 통일평화로!

통일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 상태를 이루는 길이다. 분단 프레임에 갇힌 상태에서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 구축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은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한반도 안팎의 국제정세의 근본적인 변화는 그처럼 안이한 대응으로는 미래를 열어가기 힘들게 만든다.

우리의 과제는 평화와 통일의 협연(協演)을 추구하는 데 있다. "평화를 위한 통일, 통일을 위한 평화"를 모토로 삼아야 한다. 그와 함께 한반도 평화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넘어 통일을 통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즉, '통일평화'를 구축해야 할 때이다. '분단평화'는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다. 그런즉 '분단평화'에서 '통일평화'로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분단이 '현상유지(status quo)'의 논리라면, 통일은 '현상타파'를 뜻한다. 분단 상태에서 한민족의 미래를 열어가는 일은 쉽지 않다. 그와 달리 통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번영과 미래를 보장받는 길이다. 평화의 원칙 아래, 그리고 평화적 방법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 통일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공고한 평화 구축을 토대로 남북한 주민 모두의 삶의 정상회복, 한국 경제의 제2의 도약, 그리고 자랑스러운 문화국가로서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된다.

더욱이 북한 문제는 조금도 방심할 수 없는 심각한 우려 속에서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왔다. 북한체제의 미래 전망은 한층 불투명하고 불확실해졌고 언제 어떻게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은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북한 지배층은 북한 주민의 생존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의지와 역량

을 상실한 지 오래다. 북한 동포의 삶과 미래를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한편 동서양 간 문명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세계사적 전환 과정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동아시아의 역학구도는 한국의 존재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새로운 대응 양식을 촉구하고 있다. 한반도의 두 개의 분단국가 상태로는 이 거대한 구조적 전환 과정에서 미래를 보장받기 어렵다.

따라서 통일은 더 이상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이라고 할 수 있다.

II. 통일 필요성과 통일준비

1. 통일은 무엇인가?

통일은 더 크고 더욱 부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길이다. 통일은 남북한 7천 5백만 모두가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힘차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다.

동강난 산하(山河), 찢겨진 국민! 이는 남북 분단의 역사 위에 남남 분열의 현상을 표상하는 말이다. 여기서 '한 민족, 두 국가(one nation, two states)'에, '한 국가, 두 국민(one country, two people)'의 갈라지고 찢긴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자기분열 상황은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통합은 평화와 번영의 디딤돌이다. 평화번영과 도약의 새 역사를 만드는 길에 국민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

통일은 한국 근현대사의 역정(歷程)을 한꺼번에 해소하는 일이다. 우리는 다른 나라를 침략한 역사도 없고, 이웃 나라를 괴롭힌 경우도 없는 '평화민족'이다. 제국주의 침탈기의 근대적 국민국가 수립의 실패,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일제 강점기의 치욕, 전쟁의 참화와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가 다시 한 번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길이다. 남북한 함께 손잡

고 '대동강의 기적'을 일구는 일이다.

통일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화합과 공동 번영의 장(場)이 된다. 21세기 '평화문화'의 산실(産室)이자 허브가 된다. 그리하여 통일 코리아는 독창적이고 고유한 '한반도 문명'으로 인류사에 기여하는 선도(先導)국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2.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

지금 한국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의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를 한 눈에 조망하는 '한반도와 동북아 경영 마인드'의 확립에서 시작된다. 한반도·동북아 경영 마인드야말로 21세기 한국의 비전과 세계전략의 초석이 된다.

① 통일은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는 길이다.

북한 주민은 20세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백 년 이상 빈곤과 억압의 굴레 속에서 사람다운 삶을 향유할 수 없었다. 자유와 인권, 빈곤해방과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른 채, 백 년 동안 내버려진 사람들의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아직도 전체주의적 주술(呪術)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2천 5백 만의 삶을 외면하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민족 가운데 통일을 절실히 바라는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이다. 통일은 만성적인 빈곤과 기아, 그리고 폭압적 기만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길이다. 통일은 북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여는 기회이며 희망의 등대이다.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은 통일보다 평화와 안정의 가치를 앞세운다. 그러나 작은 희생을 감내하면서 미래의 열어가는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 통일을 가장 두려워하는 측은 극소수의 북한 지배층이다. 통일로 특권을 잃을 뿐만 아니라, 설 땅조차 찾을 수없는 불안한 미래를 예견하고 통일을 결사코 거부한다. 그들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능력도 의지도 전혀 없다. 우리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과 민족의 미래 앞에서 북한의 극소수의 특권적 지배층과 결코 타협할 수 없다. 이 시대 한반도에서 살

아가는 사람들의 이러한 비인간적인 존재 양태는 반드시 타파되어야 한다. 통일은 북한 동포의 생존권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는 길이다. 통일은 절실하고, 그야말로 아주 절박한 과업이 아닐 수 없다.

② 통일로 남한 주민의 '삶의 정상화'를 회복하게 된다.

한국은 '섬 아닌 섬'이다! 차나 기차로 이웃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동서남북 어느 쪽에도 없다. 엄청난 인구 밀도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섬에 갇혀 살아간다. 안타깝게도 남한 사람들은 70년 동안 섬에 유폐되어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낸다. 이미 정상적인 심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통일로 남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 한반도 전역에서 민주주의를 확대 · 심화시켜 나갈 수 있으며, 인간의 가치와 인권 증진 문제도 본격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섬 아닌 섬'에 갇혀 살아오면서 우리는 만주 벌판과 광야를 울리던 저 웅혼 장쾌한 기백을 잊고 살았다. 통일은 이 한 뼘 땅에서 왜소하고 억눌린 심성이 탁 트이면서 우리의 청년들이 대륙으로 세계로 나래를 활짝 펴고 비상(飛翔)하는 길이다. 통일로 한민족은 대륙적 기질을 되찾을 수 있다. 통일로 오랫동안 '분단의 섬'에 유폐된 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닫힌 마음'상태에 젖어 있는 민족적 심성이 대륙적 기질을 회복하는 장쾌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③ 통일은 한국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길이다.

한국 경제는 좁은 국토와 작은 시장으로 경제성장의 한계를 더 이상 극복하기 힘들다. 현재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규모로 G20 회원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나 한반도 경제권이 통합된다면 한국의 경제적 위상은 한층 강화될 수 있다. 7천 5백 만 한반도 인구와 더불어 만주와 시베리아 등 북방지역으로 확대된 시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으로 한국인의 창의성과 도전적 모험심을 자극하여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인적 자원과 관광·지하자원 결합으로 한반도 번영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나아가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로 오래 동안 닫혀왔던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 동서양을 잇는 허브 국가이자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통일은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 경제의 활로개척의 돌파구가 된다. 통일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활기찬 번영으로 한국의 발전적 도약을 기약하는 블루오션이다. 따라서 통일로 한반도 북부 지역과 대륙을 향한 제2의 도약기 맞이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넘어 '대동강의 기적'을 일구게 된다.

④ 통일로 '녹색 한반도'와 새로운 문명을 선도하게 된다.

통일 과정에서 성장 패러다임을 넘어 '녹색 한반도'를 지향하면서 자연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환경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생태환경국가는 근대화와 산업화 중심 논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논리와 함께 '삶의 질'을 중시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특히, 북한의 경우 황폐화된 산림과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회복시키면서 하나의 완전한 한반도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 한반도 생태계 복원으로 녹색 한반도를 동북아 전체의 살아있는 생태계의 확장을 추구하게 된다.

통일코리아는 인간 존중의 문화 속에서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구가해 나가야 한다. 한민족의 역동적 삶과 미래 개척 의지는 21세기 인류 문명의 새로운 길잡이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통일은 위기이자 기회이며, 부담이기보다는 한민족 모두의 축복이다. 민족사의 미래를 열어가는 한편, 21세기 새로운 문명 전환을 선도하는 통일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통일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나, 통일을 언제까지나 유보하고 회피할 수는 없다. 이제는 통일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그동안 우리는 남북한 장기지속을 전제로 통일을 역사의 먼 지평에 설정하는 '실질적'(de facto) 통일 상태를 추구해왔다. 이런 가운데 '선 평화, 후 통일' 논리 속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선결과제로 접근해왔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점차 약화되는 가운데, 두 개의 분단국가 체제에 기반한 한반도의 평화 구축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임이 확인되고 있다. 통일을 지향하는 한민족의 의지와 열망과, 그에 반(反)하는 주변 강대국의 '투 코리아' 분할체제에 의한 '갈라먹기 식' 현상 유지론은 서로 조화되기 힘들다. 분단국가 상태로는 주변 강대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계적 패권국가의 구심력에 견인당하는 상태를 극복하기가 더욱 불가능해진다.

다른 한편, 남북한 간 확대일로에 있는 국력차로 인한 북한체제의 위기의식과 생존전략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적인 실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매우 위험한 존재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 따라서 불안정한 분단국가 상태를 극복하는 한반도의 통일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길이다.

통일은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발전 전략의 문제로, 한국의 '제2의 도약'과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의 토대 마련하는 과업이다. 이에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민족의 번영과 국가발전의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우리 모두의 통일의지의 고취가 절실하다. 우리는 더 이상 통일 상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충분이 예상하고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 이제 '기다리는 통일'보다는 '다가가는 통일'이 필요하다. '떠맡는 통일'보다는 '끌어안는 통일'이 기대된다.

3. 통일준비: 통일의지, 통일역량, 통일환경

지금까지 통일정책은 통일의 과정에 역점을 두면서 기능주의적 접근 속에서 점진적·단계적인 통일 방식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통일은 남북 간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다음 단계인 정치적·군사적 통합으로 나아가 궁극적으로 통일에 이른다는 구상이었다. 이 구상은 교류협력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핵문제를 비롯한 북한 내부 요인으로 말미암아 동북아의 긴장과 위기국면이 반복되었고 그 결과 남북 간 교류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이 힘들었다.

안보 위기와 대화 단절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오면서 한반도 통일 문제는 정부정책 차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시민사회의 담론 차원에서조차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안보, 평화, 교류협력 등의 논의가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안보 강화 논리 또는 한반도 평화 구축 논리 간 상호 대립 양상을 띠면서 전개되었다. 즉, '안보냐, 평화냐'하는 식의 논의 구도 위에서 분단체제의 현상유지에 스스로 매몰되고 말았다. 더욱이 북한체제의 존재이유(raison d'etre)의 상실과 전망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고통스러

운 운명을 외면하고 민족 미래에 대한 책임이 방기되면서 분단 현실이 타파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한편 통일에 대한 점진적·단계적 접근 방식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교류협력을 중시하는 입장은 통일을 일단 '역사의 먼 지평'위에 설정하면서 통일 논의를 자체를 외면하거나 자제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체제의 한계와 구조적 불안정성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나 또는 핵문제와 개혁개방은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한 접근 방식인 통일 문제의 차원에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마주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 문제 논의에 대한 불가피한 상황과 분단구조의 한계에 대한 냉철한 접근을 주저해온 입장이 극복되어야 한다.

통일의지 고취, 통일역량 강화, 통일환경 개선

통일준비는 세 분야에서 접근할 수 있다. 즉, '통일의지 고취, 통일역량 강화, 통일환경 개선'의 세 측면에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이 세 분야의 접근은 구체적인 역할 측면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 속에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 있으며, 각각의 고유한 영역도 있다. 통일의지의 고취와 통일역량의 강화 부문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공통의 역할 영역이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보다 강조될 수밖에 없다. 한편 통일환경 개선 측면에서 보면 한반도 통일에 대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이해와 지지를 얻고 우호적 입장을 갖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우리 정부의 고유한 책무이자 대외정책의 기본 방향이 된다.

첫째, 통일의지의 고취와 관련하여 청년층을 비롯한 범국민적 차원에서 통일의지를 드높여 나가야 한다. 여기에는 통일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통일담론의 형성과 확산,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에서 통일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통일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통일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일이 중요하다.

둘째, 통일역량 강화는 우리 사회와 정부의 역량 구축의 문제라고 하겠다. 분단체제 아래서 형성된 국가구조와 사회체제의 지양(止揚)을 통해 통일 친화적이면서 미래 지향적 형태로 탈바꿈시켜 나가는데 달려 있다. 이는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 주민이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사회와 정부의 역할과 역량 구축의 문제로, 우리가 북한과 함께 할 수 있는 국가구조와 사회체제의 틀을 새롭게 갖추고 재정비하는 일이 된다. 그런 점에서 통일비용과 관련된 경제력 강화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과제라고 하겠다. 즉, 분단체제에 적응성을 지닌 중앙집권적이고 위계적인 국가구조와 국가 주도의 사회운영 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구상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이라는 평화혁명 상황에 부응하여 새로운 통일국가로 남북한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국민국가 개조를 단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와 함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토대로 통일사회의 사회경제 체제와 운영 방식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일역량의 강화는 우리 사회의 내부 개혁을 통해 공동체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극심한 불평등 구조에 따른 양극화 현상을 해결해야 하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구축하면서 민주주의의 제도와 가치를 한층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경쟁과 사적 동기로 추동되는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 한편, 협동의 문화와 공정성의 규범과 실천을 회복시켜야 한다. 우리가 공정사회의 토대를 마련하고 복지국가의 비전 위에서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는 포용과 관용의 사회체제를 만들어 나갈 때 비로소 북한 주민들이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하는 통일에 손을 맞잡기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현재 한반도의 통일환경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독일은 지난 세기 말 무렵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소련의 몰락 과정에서 찾아온 세계사적 기회를 놓치지 않고 통일을 이루어냈다. 한반도는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 관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오히려 긴장과 갈등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는 모습이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통일로 동북아의 정치지도의 변화가 초래할 결과에 대해 뚜렷한 전망을 갖지 못한 상태이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한 통일외교가 한국의 대외정책의 기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세계사적 변화과정 속에서 우연히 찾아온 통일의 기회를 적시(適時)에 포착했다고 한다면, 그와 달리 한반도의 경우 통일의 기회가 스스로 찾아오지는 않는다. 우리는 통일의 기회를 우리의 의지와 역량으로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동북아 역학구도와 국제정세를 통일

우호적 환경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III. 통일코리아(Ⅰ): '한반도 연방제' 프로젝트

통일은 평화혁명이다. 통일은 분단 극복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이다. 분단체제의 낡은 질서의 타파 위에 8천 만 한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다. 통일로 가는 길은 남한 사회의 개혁을 동반한 통일을 추진하는 데 있다.

1. 통일코리아 국가체제의 기본방향

통일은 반드시 남북 간 협의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일준비를 위한 다양한 대안 마련과 함께 통일과정을 끌어가는 남측의 주도적 역할이 불가피하다. 남한이 인류 문명사의 흐름에 성공적으로 부응해 왔고, 경제력 차원에서 통일국가를 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어느 정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 복지,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남측이 통일 문제를 주도할 수밖에 없으며 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통일은 결코 승자와 패자의 논리로 접근될 수 없는 문제이다. 통일과정에 남한의 주도적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남측이 승자의 논리와 방식으로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예컨대 한반도 통일을 남측의 이념, 국가체제, 그리고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한반도 북부 지역인 북한에다 그대로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방식은 한편으로는 남한의 현재의 국가와 사회체제가 통일코리아의 미래 모습으로서 바람직한 대안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 과연 북한이 아무런 거부없이 남한의 이념과 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 모두의 '윈-윈' 구도 위에서 '더 좋은 나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끌어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통일코리아의 국가구조는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며, 그와 더불어 통일사회는 어떠한 가치와

원리 위에서 운영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국가구조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체제의 도래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통일을 북한의 체제변화를 전제로 2030년 즈음의 시기로 상정한다면, 통일코리아의 국가상과 사회경제체제에 대한 구상은 현재의 모습을 뛰어넘는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국가구조 문제를 살펴본다면, 통일코리아는 중앙집권적·수직적·위계적 국가체제에서 중앙정부를 둘러싼 지역(정부)중심적·수평적·협력적 국가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남북 모두 중앙집권적·수직적·위계적 국가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북한의 경우 이러한 형태의 더욱 극단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코리아는 일방의 국가체제가 타방에 흡수·확장되는 방식의 수용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다. 통일국가는 '힘 있고 권위 있는' 중앙정부의 존재를 전제로 지역정부 중심 체제로 운영되며, 지역정부 상호 간 수평적 관계 위에서 중앙정부-지역정부, 지역정부-지역정부 간 협력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국가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통일국가에서 중앙정부는 당연히 외교권과 군사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거시적 차원의 국가경제 관리와 함께 사회 안전과 치안 유지를 우선적으로 맡게 된다. 여기에다 중앙정부가 다양한 지역정부 간의 역할 조율과 예산 조정권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힘 있고 권위 있는' 정치적 구심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 전혀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러한 국가구조야말로 중앙정부가 구심이 되는 국가적 통일성을 전제로, 각각의 지역정부의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에 통일코리아의 국가체제는 연방주의의 이념과 연방제 국가의 실체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하겠다.

2. 새로운 통일방안: 연방제 프로젝트

〈연방주의 : '자치(自治)와 공치(共治)'의 원리〉

연방주의는 통일성과 자율성의 원리에 기반한 '자치(self-government)'

와 '공치(shared-government)'의 결합이라는 원칙에 근거한다.[1] 연방주의의 정치 이념은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면서, '자율성 속의 통일성', '통일성 속의 자율성'을 지향한다. 이러한 연방제는 21세기의 국가형태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 인구의 많고 적음이나, 영토의 크기 등의 객관적 요인이 연방제 형성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물론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하고 순수한 형태의 연방제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연방제는 변화해왔고 또한 다양한 형태로 계속 변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연방제는 지방정부의 자치(regional self-rule)와 단일 정치시스템 내에서 중앙정부의 공치(shared-rule)와의 조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역적 자치 및 공치(regional self-rule plus shared-rule)"의 원리를 말한다.[2]

지역공동체의 자치를 원리적으로 보장하는 정치사상이 연방주의라면, 분권(分權)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치제도가 연방제이다. 연방주의는 자치의 관행화·제도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정치적 권위와 권력의 조직에 대해 '계약'(헌법)을 통한 실질적 적용을 추구한다. 연방제는 21세기 세계 속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국가 유형으로 채택되고 있다. 21세기 초 세계는 민족국가들의 세계로부터 국가주권의 축소와 더불어 헌법적 차원에서 연방제 국가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통일코리아는 '분권·자치'의 이념에 기반한 연방제 국가체제가 바람직하다. 우선 여기서 연방제와 국가연합의 차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국가권력의 핵심인 '군사권, 외교권, 주요 내정권'(치안권, 거시경제관리 등)이 중앙(연방)정부에 귀속되어 있다면 연방제(Federalism)이며, 지역정부에 귀속된 형태는 국가연합제(Confederalism)라고 할 수 있다. 통일방안이자 통일코리아의 국가 형태는 연방제 통일방안 그리고 연방제 국가이어야 한다. 분권·자치 이념을 구현하는 연방제는 남한 사회의 국가구조 개혁의 방향에 부합하며, 북한에게 익숙한 방안으로 긍정적인 반응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통일방안이 '공동체 통합 + 국가 통합'의 조화 속에서 접근되어

1) W. H. Riker, "Federalism," in F. I. Greenstein and N. W. Polsby, eds., Government Institution and Processes (Massachusetts: Addison Wesley, 1975), p. 99.
2) Daniel J. Elazar, Exploring Federation (Tuscaloosa, Al: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87), 참조.

야 한다면, 공동체 형성(경제공동체 및 사회문화공동체)의 비전 위에서 제도(체제) 차원의 국가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북한의 국가에 선행하는 사회를 중시하고 하나의 민족사회의 회복을 지향한 것으로 법·제도 중심의 국가통일을 유보하면서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등의 공동체 통합방식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제 민족 관념으로 남북한 유대와 결합을 가능케 하는 공통분모로 인식했던 방식은 퇴행적 발상에 불과하며, 다문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시대 역행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3)]

연방제 = 미니멈 개런티(Minimum Guarantee)

우리가 통일을 얘기하자면 북한 집권층이 통일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퇴로 또는 미래 보장 없이 결코 통일의 길로 나오지 않는다. 연방제는 중앙(연방)정부와의 계약관계 속에서 분권·자치가 보장되는 국가형태로, 통일 후 지역정부의 자율성 또는 지역주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제도이기에 그들의 긍정적인 수용을 기대할 수 있고 더욱이 통일코리아의 국가형태로 바람직한 모델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연방제 통일방안은 북한 집권층에게는 최소한의 보장 장치라고 할 수 있는 '미니멈 개런티'가 될 수 있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국가 유형으로 연방국가 형태가 세계사적 흐름을 이루고 있다. 현재 세계 인구의 40%를 상회하는 30여개 국가가 연방국가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연방제 국가로 간주되거나 체제전환 과정에 있는 국가, 중앙정부의 고유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단일국가를 포함하면 현재 38개국이 중앙정부 권한의 축소와 더불어 헌법적 차원에서 연방제 국가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고 있다.[4)]

통일코리아는 군사권 및 외교권이 하나로 통합된 '1민족 · 1국가'형태를 유지하면서 여러 지역정부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집권적 단일국가 체제인 일본도 사실상 연방제에 가까운 도주제

3) 우리 군(軍)이 장교 임관선서와 병사 입대선서에서 '민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국민'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다문화시대, 軍선서문에 '민족' 사라진다" <조선일보>, 2011.4.18.

4) Ronald L. Watts, Third Edition, Comparing Federal Systems (Montreal and Kinsgt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8), pp. 29~61.

(道州制)로 국가 개혁의 방향을 모색 중이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 형태로 자치행정 구역으로서 '지방(provinces)'과 '지역(regions)'을 중시하는 분권화가 일반적인 추세임에 비추어 통일코리아도 10개 이상의 다양한 지역정부를 포섭하는 분권형 국가체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통일코리아는 중앙집권적 단일국가 형태를 지양해야 한다. 그동안 남북한 모두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 형태를 유지해왔지만, 통일국가는 정치적 다원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다양한 지방정부로 구성되는 국가형태가 바람직하다. 사실 지금까지 정치·경제·문화·인구 등 모든 부분에서 과도한 '서울-중앙'집중·집권 체제는 지방의 소외와 배제 속에서 '서울-중앙'권력의 장악을 위한 지역갈등 구조를 배태시켜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한계를 가져왔다. 또한 남북한 생산력과 생활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모든 법적·정치적 권리·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식의 통일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조정 역할 속에서 지역정부의 정치적 자율성과 창의적 경영을 존중하는 연방제 방식의 통일국가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통일을 계기로 '서울-중앙'의 집중·집권 구조를 극복하고 중앙정부와 다양한 지역정부 간의 통일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한반도형 다(多)연방제'국가 형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5)]

완성형 통일국가 = 한반도 형 연방제 국가

통일코리아가 2개의 정치체를 연방제로 통일하는 '남북연방제'를 지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연방국가가 2개의 지방정부로 이루어진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개의 지역정부가 하나의 연방국가로 통합되는 것은 연방국가의 구성 원리에 비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방국가는 어느 경우에나 3개 이상의 지방정부를 구성요소로 하며, 통일코리아는 한반도 전역에서 전통적·경제적·문화적 차원의 독자적 정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다수의 지역정부로 구성된 통일국가의 완성형으로서 연방국가를 지향한다. 일국양제 또는 특별자치지역 설정 방안은 통일의 과도기적 형태로 궁극적인 통일국가 형태는 아니다.

통일코리아는 한반도 남과 북의 다양한 지역정부의 대의민주주의를 활성

5) 조민 외, KINU 통일대계연구 2010-02,『통일비전 개발』(통일연구원, 2011), pp. 135~137.

화시켜 지역사회의 정치적 통합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새롭게 재편된 각각의 지역정부의 활기찬 에너지를 중앙(연방)정부로 통합하여 국력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6] 분권화를 위해 남한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시민사회의 활동과 지방정치문화의 육성이 필요하며, 북한 지역에서는 중앙(연방)정부의 민주화 지원정책과 함께 시민사회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남한 시민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분권화 자제가 통일국가의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므로 상당 기간 동안 중앙정부의 조정과 지원 역할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통일코리아의 통일헌법은 중앙정부의 지역정부에 대한 우위를 보장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역할을 조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연방제 통일을 위해 북한의 '정권진화(regime evolution)'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 정권진화의 방향은 수령독재체제로부터 개발독재체제로 나아가는 데 있다. 북한의 수령체제가 스스로 변화하든지 그렇잖으면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정권이 등장해야만 본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변화가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으며,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면서 남과 북이 함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연방제 통일안을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다듬어 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개혁개방과 경제체제의 전환, 북한 주민의 기대 수준 충족, 기득권층의 반발과 저항, 새로운 사회분열, 북한 주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다당제 도입), 시장경제 활동, 자발적 시민운동 등을 북한 지역의 자치와 분권 차원에서의 대안 모색이 기대된다.

3. 코리아연방공화국: '평화/민주주의/지역주권(분권)' 국가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평화, 민주주의, 그리고 '자치·분권'의 이념에 기반하여 각 지방정부의 '지역주권'이 보장되는 연방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

6) 통일코리아의 국가 형태로서 다(多)연방제를 지향한다면 미국의 연방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특히 미합중국(美合衆國 United States of America)을 준용하여 '한반도 형' 연방국가 체제의 모색이 가능하다. 미국의 연방제는 50개 주와 1개 특별구(콜럼비아 특별구, 수도 워싱턴)로 구성되고, 연방정부의 대통령이 주정부에서 위임받은 권한들 중 국방·외교권 등을 행사하며 독립국에 가까운 주정부가 독자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연방주의는 각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역에 맞는 적합한 정책 개발을 가능케 하며 획일화(uniformity) 없는 통일(unity)을 이루어 다양한 실험과 계기를 보장한다. 미합중국 헌법은 지방정부의 제한적인 자치를 허용하고 중앙(연방)정부의 공유 목적의 구현을 위해 공동의 제도와 정책을 수용하고 있다. 버나드 르완, "통일한국의 연방제," 박응격 외, 『서구 연방주의와 한국』(인간사랑, 2006), pp. 259~281.

다. 연방제는 민주적 구조 속의 정치적 통합을 가능케 하는 정치제도이다. 따라서 연방제 통일에 의해 '코리아연방공화국'(가칭 Federal Republic of Korea)은 '군사권·외교권·주요 내정권'을 장악한 하나의 중앙(연방)정부와 다수의 지방정부로 구성될 수 있다. 통일코리아는 남한의 17개 지방자치단체, 북한(2014년 현재: 1직할시, 2특별시, 9도)의 9~10개의 행정구역을 고려하여(남북한 26~27개) 지리적, 문화전통적, 교통권 및 경제권을 기준으로 남북한 협의를 통해 지역정부의 수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정부 수 조정의 경우 분단 이전의 전통적 지역 단위(8~13개)의 역사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7)]

남북한은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연방제 국가의 역사적 경험과 연방 형성의 조건이 다르다.[8)] 더욱이 이념과 체제적 간격이 현격한 남북한 사이에 하나의 연방헌법 아래 국가적 통일성을 이루어 외교권, 군통수권 그리고 주요 내정권을 갖는 연방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남북한 두 국가 상태인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연방주의의 '통일성과 자율성'의 원리를 수용하면서 남북한 현실에 맞게 연방제의 변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틀을 구축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통합을 지향하는 가운데, '분권·자치'의 원칙이 구현되는 정치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연방제, 남북 함께 가는 길

통일방안으로 연방제는 우선, 북한 지역의 자치와 자율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정치제도로 작용한다. 통일국가 수립 과정에서 남한 주도 방식은 남한의 엄청난 부담과 함께 북한 주민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통일국가의 틀 위에서 북한의 여러 지역 중심의 자치, 자율, 분권의 정치 원리가 구현되는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연방제로 남한 정치사회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통일국가 수립 과정에 남한 사회의 구조적 정치균열 요인인 지역갈등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 남한 사회의 지역갈등은 근대화 과정의 산물이지만, 남북한 분단구조에 의해 더욱 왜곡되었고 생활영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정치사회

7) 조민・성경륭・법륜, 평화재단 10주년 특별기획대담, ≪분권과 자치, 그리고 통일 : '한반도 다(多) 연방제 통일' 구상≫ Peace & One Korea Webzine 제4호, 2014.7.30.
8) 조민・박형중・전봉근・이수석, 『통일대계 탐색연구』(통일연구원, 2009), pp. 38~39.

적 단층(斷層)으로 깊이 각인되어왔다. 그 결과 지역갈등은 분단구조 속에서 해소시키기 매우 어려운 난제가 되고 말았다. 다른 한편, 지방의 공동화(空洞化)와 함께 서울에 집중된 경제와 과잉인구로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적 가치체계는 대부분 '서울-중앙'중심으로 구축되었다. 그에 따라 지방(지역)은 더욱 저발전의 함정에 빠지면서 '서울 대 지방', '지방(지역) 대 지방(지역)'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악순환적 균열구조의 극복은 연방주의 방식의 분권화를 지향하는 '국가체제의 개조'없이는 불가능하다.[9] 여기서 한반도 통일은 이러한 남한 사회의 정치사회적 균열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그야말로 국가체제의 재구조화 또는 '국가체제 개조 = 연방제'의 역사적 계기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연방제 형성은 평화와 민주주의의 증진에 기여한다. 21세기 평화의 시대는 중앙집권적 단일국가 유형이 점차 퇴조할 수밖에 없으며, 단일국가 형태로부터 다양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연방제가 보편화될 개연성이 높다. 그리하여 분권과 자치 이념이 구현되는 국가 유형인 연방국가가 늘어나면서 국제관계에서의 '국가 대 국가, 국가 대 지방정부, 지방정부 대 지방정부, 지방정부 대 국제기구, 지방정부 대 기업'등의 복잡다기한 상호협력적 관계망의 확대를 통한 평화의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10] 그와 함께 북한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방향 위에서 각 지방정부의 이념적 포용성과 시장경제의 조정 수준을 그들 스스로의 자율적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 나아가 연방제 국가 형성으로 북한 주민의 자치·자율을 존중·보장하는 헌법적 계약 위에서 지역적 다원주의의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고, 지역전통의 존중, 지역적 생활정치 영역 보장·확대를 통해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게 된다.

연방제는 타국과의 관계에서 '평화국가'의 제도적·실질적 국가형태이다. 연방제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 통일성 속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국가체제로, 남북한 통일방안 또는 통일코리아의 국가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연방제적 통일이야말로 남북한 '합의형 통일'모델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북한 사람들에게 익숙한 방안이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연방제 통일의 경우, 북한의 여러 지역(남한과 마찬가지로)들이 연방(중앙)정부 아래 각

9) 성경륭, 『국민국가 개혁론 - 연방주의와 지방주의의 논리』(한림대학교 출판부, 1996), pp. 314~324.
10) 조민 외, 앞의 책, pp. 34~35.

각 자율적인 지역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북한 통치엘리트들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할 수도 있다.

4. 연방제 = 남북 '합의형 통일' 모델

통일코리아 공화국 창립은 헌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통일헌법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먼저 남한에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한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코리아의 연방제의 원칙과 기본 방향을 밝히고, 추후 통일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동의와 동참을 구하는 방식이다. 연방제 통일국가 헌법은 통일국가에서 북한 통치엘리트의 미래를 열어주면서 북한 주민의 자주성과 자존심을 존중하는 통합 방식이라는 점에서 모두의 호응과 지지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은 북한 주민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합의통일'이자 '합류통일'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헌법 개정은 현 단계에서 통일코리아 즉, 코리아연방공화국의 연방제 국가형태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규정하는 수준이 합당하다. 그리하여 코리아연방공화국은 '평화/민주주의/지방(지역)주권'의 창조적 국가 모델로서 세계 문명의 새로운 발신지로서 인류사에 기여하게 된다.

여기서 지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 구상된 국토종합계획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2006년에 이어 2011년 두 번에 걸쳐 수정된 국토종합계획은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지속가능한 친환경 국토, 품격 있는 매력국토, 세계로 향한 열린 국토 등의 모토로 남한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구획한 구상이 주목된다. 즉,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충남북), 호남권(광주·전남북), 대구·경북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그리고 강원특별경제권 및 제주특별경제권으로 나누었다. 강원특별경제권과 제주특별경제권은 인구 2백만 미만의 지역이다. 이 광역경제권 구상은 정부 주도의 인위적 광역화정책으로 'Top-down'방식으로 추진되어 나눠먹기식 사업이 그친 구상으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얻지 못해 유산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정 부문에서 약간의 자치가 보장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5+2 광역경제권'구상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남과 북의 전역을 대상으로 '분권과 자치'가 구현되는 연방제를 추진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한반도 연방제는 경제적, 전통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남과 북의 지역정부의 고유성을 반영하는 접근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민족통합국가 고려: 벌집구조로 이루어진 다원사회

한반도의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되면 우리 역사에서 세 번째 통일을 맞이하게 된다. 신라의 삼국통일,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역사적 과업에 앞선 두 번의 통일이었다. 신라의 삼국통일이 고구려와 백제의 민족문화와 제도 등을 계승·발전시킨 통일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신라통일의 문제점과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 즉, 신라의 삼국통일은 정치적·물리적 통합이었을 뿐 백제와 고구려의 인적·문화적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고, 패배한 측의 몰락과 배제 속에서 신라의 진골 중심의 귀족적 불교문화와 통치 영역의 단순한 확장에 불과했다.

한국사에서 실질적인 민족통합은 고려의 통일로 달성됐고, 이후 고려 왕조는 민족통합을 장기 지속시키는 역할을 했다. 고려의 통일은 독자적인 영역과 주민을 거느린 수천 여 개의 지방(호족)세력을 끌어안아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서 출발했다. 고려 왕조는 초기 중앙정부에 쉽게 포섭되지 않는 다양한 지방세력과의 타협 즉, 새로운 질서 구축과 통합적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통합국가를 이루어냈다. 고려는 통일 후 신라와는 달리, 승자의 오만과 독식을 거부하면서 다양한 지방세력을 통일국가의 동반자로 삼았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또는 평화적인 통일전략으로 고려왕조의 지배구조 즉, 중앙정부와 지방세력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려사를 연구해온 박종기는 민족통합의 새로운 모델로 고려의 본관제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는 고려는 통합을 이루기까지 거의 50여 년간 지역 간·계층 간 극심한 갈등을 겪었으나, 고려가 그러한 갈등을 수습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면서 통합을 이루고 5백 년 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이 '본관(姓貫)제'에 있었다고 한다. 본관제는 고려 초기 중앙정부가 지방세력에게 성씨와 본관을 주어 그들의 영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해주는 한편, 지방세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취한 정책이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그들을 국가의 지배질서에 편입시켜 그들로 하여금 민(民)의 유망을 방지하고 조세와

역역(力役)을 수취하여 국가의 물적 기반을 확보하고 지방사회를 안정시켜 지역적·계층적인 통합력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에서 시행되었던 독특한 통합 메커니즘으로 이해된다.[11]

고려의 본관제는 대단히 복합적인 사회구조를 형성시켰는데 크기와 위상에 따라 격을 달리하는 수많은 본관 단위가 지방사회에 벌집처럼 분포되어 있는 특이한 사회구조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고려사회를 '벌집구조의 사회'로 부르기도 한다.[12] 민의 직접지배가 가능해지는 조선시대와는 달리, 고려의 사회구조의 특징은 지역적 독자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중앙정부와의 관계망을 형성했다. 이렇게 볼 때 고려 초기 중앙정부와 지방세력을 매개하고 국가사회를 통합하는 제도장치였던 본관제는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지역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즉, 분권과 자치의 원리를 보장하는 연방주의 이념과 맥락이 닿아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통일로 가는 길에 다시 한 번 한반도 연방제 프로젝트의 의의를 강조하고자 한다.

IV. 통일코리아(II): '사회적 국가'와 협력경제(협력사회)체제

1. '사회적 국가'의 재구성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는 경제적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재산과 소득의 불평등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 통일사회에서 예상되는 극심한 불평등 문제와 사회정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참된 통합을 이룰 수는 없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이는 남북통일 이전에 먼저 남한 사회의 국민적 합의와 개혁을 통해 '민주적=공정한'시장경제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확립해야 한다.

시장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에 불과하다. 시장경제의 위기는 부와 권력을 가진 소수 특권층의 탐욕과 절제를 잃

11) 채응석, "고려전기 사회구조와 본관제,"『고려사의 제문제』(삼영사, 1986); 박종기, "고려시대 군현 지배체제와 구조,"≪국사관논총≫4, 1989;『5백년 고려사』(푸른역사, 1999), pp. 121~134.
12) 박종기, 앞의 책, p. 139.

어버린 과두체제에서 비롯된다. '이익의 사유화·손실의 사회화'구조는 정상적인 시장경제라고 할 수 없다. 과잉의 폐해를 방지할 적절한 조정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만이 온전하게 작동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하다.[13)]

시장경제와 세계화는 부의 엄청난 증대와 함께 세계 도처에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붕괴 위에 만개했던 시장경제는 무절제한 욕망과 탐욕으로 자정 역량을 상실한 신자유주의식 시장경제(시장근본주의)로 전락하였다. 시장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배하고 심지어 시장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는 공동체를 해체하고 인간을 파편화시켰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극심한 양극화와 중산층의 몰락도 신자유주의식 시장경제의 부정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양극화는 공동체를 파편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에서 목도했듯이 시장시스템 자체를 파괴시킨다. 시장은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의 행복을 구현하는 수단이자 도구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사회주의체제 몰락 이후 신자유주의의 깃발 아래 세계경제는 엄청난 부와 거대한 불평등을 동시에 가져왔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가 더욱 더 평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21세기를 바라볼 수 있을까? 프랑스의 젊은 학자 피케티는 21세기는 자본이 자본을 낳는 '세습자본주의(Patrimonial Capitalism)'로, 자본의 수익률이 생산과 소득의 성장률을 훨씬 웃돌아 자의적이고 견딜 수 없는 불평등을 양산시켰다는 사실을 검증하여 커다란 주목을 끌었다. 상속 재산 수익이 노동

13) 시장은 속성상 자유 이념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역사적으로 신분제, 도그마, 예속적 질서, 억압적 통치구조를 해체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칼 폴라니(Karl Polany)는 시장경제의 충격으로 인간은 노동력이 되고 자연은 토지로 환원되면서 인간 비극의 드라마는 자본가의 탐욕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체제 즉, 시장경제의 겁탈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하면서 사회를 가차 없이 분쇄한 시장경제를 '악마의 맷돌(Satanic Mills)'이라고 했다(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es of Our Time, 1957). 그러나 민주주의가 인류 사회에서 보편적인 정치적·사회적 원리로 자리 잡는데 있어서 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입장도 주목된다. 프랑스의 지성 아탈리(Jacques Attali)는 상행위의 자유가 정치적 자유를 탄생시켰다고 하면서, 상인 계급은 시장을 형성했고 시장은 민주주의를 낳았다고 하는 논리아래 사회의 두 기둥인 시장과 민주주의는 '시장민주주의'를 만들어낸다고 한다. 나아가 시장과 민주주의는 공존하기도 하지만, 서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예측 가능한 미래는 이처럼 시장과 민주주의 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Une Breve Histoire de L'Avenir『미래의 물결』, 2007). 우리는 대개 전통적 권위, 통제, 억압적 질서 등을 해체시켜왔던 시장경제의 역동성에 착안하여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시장경제)에 대한 기대를 숨길 수 없다. 그러나 이미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상황을 넘어 거의 파괴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남한의 시장경제체제를 감안한다며 통일로 가는 길에 남북한 경제 수위(水位)가 전혀 다른 현실에서 시장경제의 '적용과 극복'의 문제는 동시에 숙고되어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으로 평생 쌓은 부를 압도하면서 자본 집중도가 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 결과 세습자본이 사회적 노동의 가치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불평등 수준이 점점 높아졌고 미래는 더욱 암울해지고 말았다. 이러한 불평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피케티는 '누진적 소득세'와 '글로벌 자본세'를 제안하였다.[14] 물론 이는 가까운 시일 내에 쉽사리 합의를 얻기 힘든 '유토피아적 이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와 중간층 몰락 문제의 해결에 대한 어떠한 토론이나 전망도 없이 통일 사회의 미래를 논의하는 일은 그저 공허한 얘기로 들릴 뿐이다. 일자리 창출과 무관한 대자본이 국가를 도구화하면서 사회의 구석구석을 장악하는 현실 속에서 소규모 자영업이나 노동은 몰락의 길을 걷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극단적으로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구조가 혁신되지 않으면, 노동의 의욕과 가치를 찾을 수 없고 극심한 좌절과 냉소적 분위기 속에서 분노, 증오, 한탕주의, 도덕적 불감증 등이 만연되어 공동체는 안으로 붕괴되는 내파상태에 이르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바로 이러한 극한 상황의 문턱에 와있다.

국가(=정부)가 실질적으로 대자본과 세습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그런 국가의 존재이유를 수용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고 공동의 이익이 사적 이익에 앞서도록 하는 국가 즉, '사회적 국가(social state)'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통일 과정과 통일 후 국가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부(=국가)의 시장과 경제에 대한 기획, 개입, 조절, 통제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 및 의료 서비스의 대부분을 공공지출로 담당해야 하며, 북한 사회의 다양한 재건 부문에서 사회적 지출의 필요성이 크게 증폭되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분출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국가의 귀환'이 예상되며, 통일을 준비하는 지금 '사회적 국가'의 이념을 재확인하고 새롭게 국가체제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장자유주의에 입각한 반(反)국가주의는 반(反)시장주의만큼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14)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장경덕 외 옮김,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글항아리, 2014), 참조.

독일 통일의 경우, 동서독 사회체제의 근친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서독의 사회민주주의의와 '사회적'시장경제에 기반한 높은 수준의 복지체계와 동독의 비록 실패했지만,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 이념의 지향성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았다. 독일 통일은 신자유주의가 습격하기 전에 이루어져 노동 즉, 일자리의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고통을 회피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15]

2. '공정한 시장경제'와 '협력적 공유경제'의 듀엣(Duet)

지금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변혁의 초기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점점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되고 활용되는 사회에 보다 적합한 경제 모델이 부상하는 가운데 자본주의 시대는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 것은 다른 아닌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그 운용 논리의 극적인 성공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자본주의 미래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전망을 제시한 리프킨의 연구가 통일코리아의 사회구성의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는 자본주의 자체의 운용 논리에 따라 '제로 수준 한계비용'이라는 필연적 미래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러한 한계비용 제로 사회는 전반적 복지를 증진하는 최적의 효율 상태로서 자본주의의 궁극적 승리를 상징하기만, 바로 승리의 순간은 또한 자본주의가 세계무대의 중앙에서 불가피하게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물론 자본주의가 아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한계비용 제로 사회가 다가올수록 도전을 불허하던 스스로의 권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말이다.[16] 봉건제가 봉건제 태내에서 자라난 모순으로 인해 몰락했듯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핵심에 자리 잡은 모순이 자본주의 시스템 즉, 중앙집권적 상의하달 식

15) Rolf H. Hasse, Hermann Schneider, Klaus Weigelt(Hrsg.)/이규석, 이유정, 정영진, 최용호(번역), 『사회적 시장경제 - 독일 경제정책 A에서 Z까지』(주한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2005. 12), pp. 242~267.

16)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안진환 옮김,『한계비용 제로 사회 - 사물인터넷과 공유경제의 부상(The Zero Marginal Cost Society: The Internet of Things, the Collaborative Commons, and the Eclipse of Capitalism)』(민음사, 2014), pp. 33~48.

경제활동의 수직적 통합을 이끄는 산업화 시대의 산물인, 이는 사회주의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자본주의로부터 보다 분산적이고 협력적이며 수평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경제로 변화되면서 자본주의체제의 질적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추구함으로써 효율성과 생산성이 증가해 한계비용이 제로 수준으로 낮아지면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잠재적으로 무료가 되고 풍요의 경제가 실제로 가능해지는 시대를 만나고 있다. 그리하여 희소성보다는 풍요가 특징인 시대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경제사회로 나아가는 전망이 가능해진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혁명으로 신기술 플랫폼 구축되면서, 신기술 플랫폼이 자본주의 자체의 변혁을 초래하고 있는 중이다. 즉, 21세기 지능형 인프라에서 커뮤니케이션 인터넷과 초기 에너지 인터넷, 여기에다 물류 인터넷이 결합한 '사물인터넷(The Internet of Things, IoT)'을 형성하여 완전히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17] 극도의 생산성이 주도하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을 연결함으로써 더욱 빠르게 재화와 서비스가 거의 무료 수준인 시대로 이동하고 그와 더불어 자본주의는 머잖은 시기에 '협력적 공유사회'가 경제생활을 조직하는 지배적인 모델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신기술 플랫폼이 정착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셜네트워크에 참여하여 협력적 공유사회의 삶을 구성하는 새로운 관행과 다양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공동으로 창출하게 되는 사례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폭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실 공유사회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본주의 시장이나 대의정치보다 더 오래된 형태의 제도화된 민주적 관리방식이라 할 수 있다.[18] 공유사회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으면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다양하고 무수한 자주적 관리조직으로 구성된다.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공유사회는 전 근대의 자본주의 이전 단계에서는 인류 사회 어느 곳에서나 쉽게 발견되는 사회형태였다. 전 근대의 공유사회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밀려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1세기 인터넷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체계의 질적 전환, 그와 더불어 물류메커니즘의 혁신 등을 포괄한 신기술

17) J. 리프킨, 앞의 책, p. 24.
18) Carol Rose, "The Comedy of the Commons,"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53(3), 1986: 720.

플랫폼으로 사유제와 사적 이윤 동기 그리고 경쟁에 기반한 자본주의를 넘어 경제 메커니즘의 새로운 작동 원리인 공유경제의 형태가 되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은 이기심에 기초하고 물질적 이득에 의해 주도되면서, 소유권을 최고의 가치로 숭상하고 독립체 추구를 촉진하는 모델이다. 반면에 공유사회(social Commons)는 공동의 이익에서 동기를 부여받고 서로 연결하여 함께 하고자 하는 깊은 열망에 의해 주도되면서, 오픈 소스 혁신과 투명성 그리고 공동체 추구를 증진하는 모델로 볼 수 있다. 나는 이러한 공유경제·공유사회가 이미 인류의 '오래된 미래(Ancient Futures)'였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미래는 시장이 세습독재체제와 '주먹구구 식'경제를 궁극적으로 해체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해체의 폐허 위에 시장경제의 논리만 자리 잡을 수는 없다. 통일코리아는 북한의 공유사회의 조직 형태와 특성을 살려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여 한다. 비록 그러한 이념과 제도가 형해화(形骸化)되어 껍데기만 남아 있는 상태라도 공유사회의 원리와 가치가 사라지지 않고 복구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2백~3백여 명이 소속된 협동농장의 경우 노동의욕의 상실과 조직의 형해화로 생산성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하여, 협동농장을 사유화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토지에서 축출되는 상황은 엄청난 사회적 재난을 초래하게 된다.

협력적 공유경제는 양극화와 소득 격차를 극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면서 경제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한편 환경 측면에서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배근은 여러 노작을 통해 현재 인류세계가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시대로의 이행기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협력과 공유'야말로 새로운 시장 시스템의 직동 원리이자, 21세기 세계경제의 실천 규범이라고 역설하고 있다.[19] 자유, 사유제, 소유권, 법적 체계 등의 가치를 천부인권의 수준으로 절대시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이념은 서서히 퇴색되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지는 않지만 더 이상 문명을 위한 경제적 어젠다를 독점적으로 장악하지

19) 최배근, 『시장시스템들의 붕괴와 대변환』(집문당, 2012); 『협력의 경제학 - 탈공업화과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학』(집문당, 2013), 참조; 앞의 책에 대한 서평으로 조민, "'협력과 공유' 새 시장 시스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2012년 7월호), p. 38.

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시장을 초월하는 세상으로 조금씩 진입하면서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는 글로벌 공유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자본주의 시장과 협력적 공유사회가 뒤섞인 하이브리드 경제의 출현을 목도하고 있다. 통일코리아는 공정성을 담보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새롭게 형성되는 협력적 공유경제가 종종 제휴하거나 경쟁하는 관계 속에서 듀엣이 연출되는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다양한 소유제의 조화 : 사적 소유, 협동적 소유, 사회적 소유, 국가적 소유

한편 통일국가의 참된 통합을 이루는 데는 소유제와 관련한 북한 기업 및 토지 문제 해결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통일 후 북한 지역의 토지 문제는 경제적 효율성 못지않게 '보편적 정의감'에 입각하여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 지역 토지에 연고권을 가진 극소수의 주장으로 인해 통일 과정에서 혼란과 불필요한 논쟁이 초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은 새로운 국가 건설 차원에서 남북한 주민 모두의 미래를 위한 창조적 과업이기에 극소수의 특별한 주장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 그와 함께 우리는 북한의 토지제도를 남한과 같은 토지사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일종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업과 토지 등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며, 효율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소유제는 사적 소유, 협동적 소유, 사회적 소유, 국가적 소유 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보편적 정의의 원칙 위에서 북한 주민의 이익을 반영하면서 소유제 전환 방식의 합리적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사유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 등은 북한 종사자에게 매각하고, 토지 문제의 경우 북한 주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식의 토지제도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통일코리아는 다양한 소유제도의 유지가 바람직하다. 북한의 국가적·사회적 소유제의 근간을 상당 기한 사유화의 방식, 대상, 수혜층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대자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통제받지 않는 재벌과 같은 '경제적 괴물'이 북한의 기업과 토지를 매입하는 형태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V. 에필로그

21세기 세계사적 흐름과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 통일은 가시권에 들어왔다. 북한 변수로 인한 한반도의 정치변동 상황을 한국 주도로 관리·통제하면서 한반도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할 때이다.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회 모두의 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테면 '공(共)진화'라고 할 수 있는데, 남한 사회체제의 혁신과 함께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 또는 정권 차원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030년 통일 상황을 상정하고 이제 우리는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할 때라고 하겠다.

〈북한 관리〉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협력의 틀을 구축하면서 이제는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남북한 장기지속을 전제로 통일을 역사의 먼 지평에 설정해 왔으나, 분단국가 상태로는 주변 강대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계적 패권국가의 구심력에 견인당하는 상태 극복이 더욱 불가능해진다. 다른 한편, 남북한 간 확대일로에 있는 국력차로 인한 북한체제의 위기의식과 생존전략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적인 실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매우 위험한 존재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 따라서 불안정한 분단국가 상태를 극복하는 한반도의 통일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길이다.

먼저 북한은 핵 딜레마에서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 북핵은 우리에게는 최대의 '실체적 위협'이다. '핵 그림자'아래 북한과의 '불안한 동거'상황이 지속된다면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관계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 비핵화 원칙 위에서 북한 내부 사정과 국제정세의 변화를 점검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아나가야 한다. 물론 북핵 문제는 쉽게 풀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은 아니다. 우리는 출구를 기다리지 말고, 출구를 찾는데 적극 앞장서야 한다.

통일: '대화 ⇨ 협상 ⇨ 타협'

통일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나, 통일을 언제까지나 유보하고 회피할 수는 없다. 더욱이 머잖은 시일에 '떠맡는'형태의 통일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 통일은 점진통일과 급변통일로 나눠볼 수 있다. 점진통일은 단계적인 통일 방식이며, 급변통일은 북한의 붕괴에 의해 남한이 통일을 떠맡는 형태의 통일 방식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통일은 남북한 주민의 합의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점진통일이든 급변통일이든, 통일 상황에 대한 예측과 대비책을 마련하는 일이 무척 중요하다. 북한을 관리하는 한편,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해 나갈 수밖에 없다. 북한 정권은 인민의 삶을 최우선시하고 인민의 생활개선을 국정 최고목표로 삼는 '선민정치'로 탈바꿈해야 한다. 선군정치의 소극(笑劇)이 막을 내리고 선민정치의 시대가 개막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해야 한다.

북한의 미래 전망의 회복을 위한 대북지원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북한 체제의 향방에 대해서는 북한 지도부와 주민들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하나, 그 과정에서 북한의 불확실성은 적절히 통제ㆍ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관리'는 불가피하며, 신중하고 면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서로 떨어진 상태에서 북한관리는 비효율적이며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대북지원과 남북협력을 통해 가까이 다가가면서 한민족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 '대화 ⇨ 협상 ⇨ 타협'의 방도 이외의 다른 길은 없다.

한반도 통일은 상당히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통일은 바람직하며, 역사의 필연이다. 그러나 새로운 통일 한반도는 재건 과정에서 엄청난 정치적·경제적 재정적 부담을 겪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로 대량난민사태, 경제재건 등과 같은 새롭고 지속적인 도전들을 극복해야 하며, 이러한 위기와 불확실성을 충분히 해소해 나가야 한다.

〈통일외교〉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동북아 지역의 정치지도의 변화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는 동북아 지역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역학관계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안이다. 통일은 결코 '우리 민족끼리'만의 문제일 수

는 없으며,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 위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이 기대된다. 한·미동맹의 의의와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역할 변화를 전제로 주한미군의 주둔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주변국에 설득하는 통일외교가 절실하다.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평화협력의 기반 위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이러한 우리 통일정책의 기본 입장을 국제사회에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 '핵 없는 한반도'통일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통일외교가 중요하다.

〈공유와 나눔의 철학〉

통일을 위해서 공유와 나눔의 철학이 요구된다. 남북 간, 계층 간 차별이 철폐되고 차이를 줄여야 한다. '함께 살고, 함께 나누는'영역이 많을수록 통일은 보다 빨리 오고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 남북한 통일과정에 요구되는 엄청난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통일비용은 통일에 따른 남북한 간 격차 해소 및 이질적인 요소를 통합하는 데 소요되는 체제통합비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남북한 경제력 격차 해소 및 경제통합비용, 정치·사회·문화적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해소비용 등을 포함한다.

통일비용은 소모적 비용이기보다는 미래 투자비용이라 할 수 있다. 통일비용 마련을 전제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며 비현실적인 접근방식이다. 통일비용은 소모적인 '분단비용'을 해소시키면서 통일코리아의 미래를 위한 투자 성격의 비용이며 통일에 따른 무한대의 유무형의 편익을 가져온다. 재정측면의 통일 준비도 중요하나, 미래와 참된 통일을 위해 남한 사회의 희생과 양보의 미덕이 절실하다. 통일과정은 어느 면에서 남북한 주민 모두의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통일 리더십〉

지금 우리에게는 통일리더십이 절실히 요망된다. 평화와 통일은 만들어가야하며, 머지않은 시기에 들이닥칠 수 있는 '역사적 계기'를 반드시 통일로 이끌어야 한다. 바로 이 역사적 순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결단력을 갖

춘 정치적 리더십이야말로 통일과업에 결정적인 덕목이 아닐 수 없다. 통일 리더십과 함께 민족의 미래에 대응하는 냉철한 전략가 그룹의 존재와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국가지도자 그룹의 통일 의지와 리더십으로 국민통합을 이끌어내야 한다. 통일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상호 설득적인 논리 개발과 함께 초당적인 합의 도출의 관행도 기대된다. 통일을 향한 정치권의 의지와 국민적 열망을 묶어내어야 한다.

북한체제에 대한 냉정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릇된 인식과 지나친 관용은 분단 현실과 민족의 미래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어렵게 하며, 북한 주민들의 입장과 고통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반면에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적 규범 준수의 요구는 불가피하나 남북한 문제를 단순히 '국가 대 국가'관계로 접근함으로써 자칫 남북한 '특수관계'의 의의를 상실하는 우를 초래할 수 있다. 통일 리더십은 '전략적 마인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차가운 전략 마인드와 더불어, 한민족=한겨레의 역사와 영혼을 끌어안는 '혼'(魂)이 담긴 리더십이 요구된다. 통일에 대한 우리 사회의 국민통합과 남북한 간 민족화합이 중요하다. 민족화합과 국민통합은 절절한 수사(修辭)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적·제도적 대안으로 정치적 타결을 이루어내는 데에는 연방제 통일방식이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통일은 절체절명의 국가목표이다.

통일코리아로 가기 위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향유하는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와 협력경제의 원리가 작동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와 함께 공공선(公共善)의 구현자로서 스스로 '사회적 국가'의 소임을 충실히 완수하는 나라를 세워야 한다.

발 표 2

통일로 가는 길: 북한의 통일 준비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Ⅰ. 통일로 가는 새로운 길
Ⅱ. 북한이 나아갈 통일이 길
Ⅲ. 맺음말

Ⅰ. 통일로 가는 새로운 길

본 글은 현재 상태의 남북한 사회가 하나로 화학적 결합을 할 경우 그것이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는 있겠지만, 상호간의 사회적 통합과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이루기에는 심각한 불안감과 우려를 갖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6.25 전쟁 이후 우리는 긴 기간을 실질적인 통일보다는 분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집중해 왔다. 평화는 분단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현상을 유지하는 정책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통일은 분단의 극복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현상을 타파해야 접근할 수 있는 결과물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궁극적 평화는 분단의 극복과 통일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다.

남과 북은 정치적 아젠다와 요란한 선전 문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분단의 관리를 추구해왔다. 심지어 북은 무력사용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남쪽의 내부분열과 정부타도로 통일을 얻겠다는 강제병합 정책에 매달리기도 했다. 남과 북의 분단관리는 상호 체제 유지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중대한 성과를 가져다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쪽도 실질적인 통일 과정과 통일이후 준비에는 적극적이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이젠 통일을 더 이상 북한의 식민지화, 남한의 식민지 해방으로 연결하여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남과 북이 상호 적대적이고 대결적 구도를 갖고 있더라도 통일의 결과가 상호 구성원들에게 호혜적 이익과 만족감, 그리고 기대감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통일로 가는 새로운 길이 되어야 한다.

통일로 가는 길 - 북한의 통일 준비는 북한 당국이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왔는지를 분석하는 과거지향적 내용은 아니다. 북한은 조국해방을 선언하며, 6.25 전쟁을 일으키고, 휴전 이후 계속해서 군사적 도발을 일으키면서 남한 해방을 통일의 길로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에는 큰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발표문은 북한이 현재 진행하고 있고, 이제까지 어떠한 통일 준비를 해왔는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의미하는 '북한의 통일준비'는 실제적인 통일을 위해서 북한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며, 북한 사회가 어떠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통일이 가능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것이다. 즉 북한이 어느 수준의 변화를 모색하고 어떤 사회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통일 사회가 달성될 수 있고, 안정적인 통일한국과 통일 한반도를 이룩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는 것이다.

II. 북한이 나아갈 통일의 길

1. 한반도 구성원의 자유로운 선택과 동의에 의한 통일

통일은 자신의 체제 안전을 위해서 상대 체제의 붕괴를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있어왔다. 결국 이러한 통일 논의는 진정한 의미의 분단극복보다는 체제 안전의 확보를 위한 상대 체제의 흡수를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현재 남북한 통일 논의의 많은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며, 안보위협의 완전한 제거를 위한 통일논의도 예외는 아니다. 남북한의 통일은 체제의 통일을 가져오겠지만 그것이 체제 위협의 해소를 가져오더라도 각 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어느 일방이라도 원하지 않는다면, 강제적 억압적 차원의 통일은 더 큰 후유증을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 논의에 앞서서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강제적 병합은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선언이 요구된다. 강제 병합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이다. 통일 시나리오로 제시되는 무력통일, 흡수통일, 협의통일 중 무력통일은 강제병합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흡수통일과 협의통일은 강제적 병합을 반드시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흡수통일의 경우에도 상대측이 통합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한쪽에서 그것을 강행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협의통일은 일반적으로 강제병합이 아닌, 상호 동의와 선택에 의하여 통일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제병합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무력통일과 강제적 흡수통일을 하지 않고 상대 구성원의 동의가 전제될 경우에 한해서 통일을 이룬다는 의미이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무력과 강제적 병합이 아닌 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전제로 할 경우 병합되는 약세에 있는 지역의 선거를 통해서 의사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병합의 주체적 성격을 갖는 우세한 지역은 상대측

에서 선거 등 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통일을 결정할 경우 그것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는 없다. 단지 병합의 형태와 각 지역 또는 전체 통일한국의 정치와 경제, 사회운영 방식에 대한 선택은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남과 북은 한반도 전체 구성원을 상대로 자유롭게 자신의 체제에 대한 선호를 갖도록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구성원들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여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남북한은 상호 개혁과 개방이 요구되며, 특히 북한주민들에게 객관적 정보에 의한 상호비교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까지 한반도에 분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남과 북에 통일 방안이 없거나, 통일논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상대 체제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통일되려면 북한주민들이 남한사회체제에 동의하여 남한식의 통일을 선택하거나, 남한주민들이 북한식의 사회체제를 선택하고 동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둘 다 상대체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동서독의 통일은 동독주민들이 서독으로의 통일을 선택함으로써 달성된 것이다. 서독은 동독 주민들의 선택과 결정을 수용했을 뿐이다. 즉 어느 쪽이 상대주민들의 마음을 얻느냐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체제경쟁은 상대측을 붕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을 부강하게 만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다. 선의의 체제 경쟁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 결과 한반도 구성원들의 선택이 필요한 시기에 자유로운 체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면 될 것이다.

2. 남한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 보장 선언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와 이념에 의한 통일을 달성하려면, 그 체제와 이념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무력에 의한 강제적 통일 상황이 아니라면 남한주민들의 동의와 수용은 전제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남한사회에 자신의 체제와 이념에 대한 수용을 강조하고 선택을 받으려면 남한주민들에게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우호적 평가는 어떠한 형식의 통일이 되더라도 통일 환경 조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통일전은 물론이고 통일 이후까지도 남한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명시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남과 북은 자신들의 주민이 상대측에 공개적으로 들어갈 경우에 한해서만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있으나, 통일을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확고한 안전과 보호의 약속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금강산 박왕자씨 피격사건과 천안함, 연평도 사태는 북한지역에 들어간 남한주민은 물론이고 남한 거주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북한 통일과 통합을 위해서 북한 당국은 한반도 구성원 전체와 한반도의 모든 재산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천명하고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3. 북한주민의 생존권과 생명권 보호

한반도의 통일은 기본적으로 3가지 조건이 유지되는 상황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한반도 구성원들이 살아있어야 한다. 남북한 주민들이 살아있지 않는 조건에서의 통일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어진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생명을 잃거나, 남한주민들이 북한의 핵공격과 전쟁으로 다수가 생명을 잃는다면 국토의 통일은 될지언정 사람의 통일은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최소한 북한주민들의 의식주와 안정적인 삶은 보장해주어야 한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이후 '고난의 행군시기'수백만 명이 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주민들이 생존과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계속되고, 돌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백만 명이 생을 마감하는 상황은 재현되지 않도록 북한 당국은 개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 구성원들이 현재의 거주지에 살고 있어야 한다. 우리 통일 정책의 핵심은 북한이 텅 빈 상태에서의 통일은 희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북한주민들이 거주지를 떠나 중국과 제3국으로 대규모 이탈한 상황에서의 국토의 통일은 진정한 통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최소한 북한주민들이 현재 삶의 터전에서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199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수십만 명 이상의 북한주민들이 중국 국경을 통해서 탈출을 시도했다. 이들은 대부분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부족으로 아사 상태에 빠져있었으며,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국경을 넘게 되었다. 이들 중 다수는 중국에 의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었으며, 일부는 현재까지 중국지역에 체류하고 있다. 최소한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서 국경을 넘어 타국에서 불법적 신분으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는 것만은 해소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 구성원들이 건강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 북한주민들이 현재의 삶의 터전에서 살고 있다하더라도 이들의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 유지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통일은 상상하기 어려운 후유증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주민들의 생존과 생명권에 대한해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유지되도록 사회 경제 체제를 운영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와 임산부, 여성의 건강은 사회 후속세대까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의 영양과 건강상태는 통일한국의 성공적 정착에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영유아와 임산부,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국제기구의 협력과 지원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북한주민들의 건강은 통일 한국의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결핵과 전염병 등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 또한 현재 북한의 마약 사용자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그 영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청소년과 여성의 마약 사용자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의

마약 사용은 통일 이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통일 준비차원에서도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법치와 준법의식

현대 사회 운영원리의 공통적 근간을 이루는 것은 법치주의이다. 법치(法治)는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에 의한 만인의 평등을 추구하고, 사회 운영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북한은 형식적 수준의 법치의 틀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주체사상과 당, 권력기관, 그리고 지도자에 의한 인치(人治)중심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치 중심의 남한과 법치가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북한의 상황에서 통일한국의 모습은 긍정적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현대 국가 운영의 원리이면서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이기도 한 법치주의의 실제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북한 법률과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 보편적 법률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권보호 등의 조치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우선적으로 자신들이 제정하고 적용하기로 선포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노력부터 시행해야 한다.

국제인권법과 국제적 기준의 적용도 필요하지만, 자신들의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제정한 법률만이라도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인권보호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과도한 형벌과 인위적인 처벌, 차별과 배제를 억제해야 한다.

북한 법률과 사법체계가 근대적 기준에 적합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보편적 기준의 국제법규가 적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법률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편하고, 사법종사자들에게 현대 국제사회의 법률적 지식을 함양하도록 하고, 국제인권법과 각종 규약에 가입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경우 한반도의 친통일 환경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북한사회에서 법치의 제한적 적용은 불가피하게 주민들의 준법의식도 미

약하게 만들었다.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준법의식에 대한 조사결과 북한 생활 당시 준법의식은 매우 미약했으며, 준법 보다는 권력과 세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을 달성하고 통일된 국가의 효율적 사회 운영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법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준법의식을 내재화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있는 문화적, 사회적 환경을 북한 당국은 만들어 나가야 한다.

통일된 한반도를 위해서 북한은 법치를 근간으로 사회운영 및 통치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주민들이 준법의식을 고양하도록 사회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북한에서의 법치와 준법의식 제고는 민주주의와 인권, 시민사회의 영역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4. 합리적 선거제도와 시민사회 영역 존중

한반도 통일과 통일 이후 안정적인 사회 갈등 해소와 통합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결정은 선거를 통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동서독의 경우 동독 주민의 선거를 통해서 통일이 결정되었으며, 통일 전후과정에서 중요한 사회적 결정은 선거와 선거의 결과 선출된 대표자들의 역할에 크게 의존하였다.

동독의 경우 선거를 통해서 서독과의 통일을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서독과의 통일 이전에 이미 동독지역의 과거청산에 대한 논의와 중요한 원칙들을 동독 의회에서 결정해 두었다. 통일 독일은 동독 의회의 과거청산에 대한 논의과정을 이어받아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대규모로 야기할 수 있는 과거청산 작업을 큰 갈등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독지역에 합리적인 수준의 선거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그 대표자들의 역할은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데 크게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현재 북한의 선거제도는 형식적 경과 조치에 불과할 뿐 실제적 선거제도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선거는 복수정당제도와 선거운동의 보장, 자유

로운 토론문화, 선거 4대 원칙의 준수 등이 요구되는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다. 또한 선거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중론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주요 결정과정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선거의 기본적 의미와 절차에 대한 초보적 수준의 학습 기회는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선거와 여론은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시민사회도 존재할 수 없는 조건이지만, 통일 한국의 원활한 형성과 운영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 스스로의 주권과 대표성을 표출할 수 있는 시민사회 영역이 존재하고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상 전면적이고 일반적 수준의 시민사회 형성은 요원하겠지만, 북한 주민들의 해외 초청 연수, 인권 기술협력, 교육과정 개편 지원, 종교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북한 사회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보편적 국제적 기준 적용의 확대

현대 국가는 지구촌의 일부분으로 작동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세계적인 표준화 작업, 항공, 항해, 무역 등의 세계적 단일체계의 적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세계 어느 국가도 완전한 고립 상태에서의 운영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세계적 환경에 부응하여 북한도 일정 부분에서 보편적,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인권, 환경 등 많은 부분에서 일반적 보편적 기준을 외면하고 있다.

국제적 스포츠와 기후 환경, 자연 및 문화유산 보호, 노동과 인권, 소수자 문제, 인도적 문제, 통상문제 등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기준이 통용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제적 기준을 수용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분야에서의 남북한 협력은 국제적 협력에 우선하여 실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여성,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조치, 일반적 인권보호 조치, 보편적 권리와 의무 적용, 통신과 통행, 통상의 보편적 규정 적용을 통해서 특수사회에서 일반 보편화된 사회로 변화되어야 한다.

6. 핵과 대량살상 무기 감축 및 폐기

북한은 체제 안전과 비대칭전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은 국토의 통일과 사람의 통일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거대 군사국가인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이 통합되는 것도 의미한다. 남한과 북한이 핵과 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를 대규모로 보유할 경우 그 자체가 통일논의에 장애가 될 것이다.

특히 핵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권적 의미를 갖는 강력한 무력이기 때문에 핵 보유는 통일논의와 협상, 그리고 통일체제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통일로 인해서 남북한의 군사력이 급격히 강화될 경우 중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의 통일에 대한 협조와 동의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한반도의 통일과 통일한국의 안정적인 동북아지역에서의 활로 보호를 위해서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과 폐기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는 북한 체제에 대한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것은 한반도의 통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III. 맺음말

남북한의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 모두 일정 부분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정도의 폐쇄적인 북한사회의 변화는 많은 부분이 요구된다. 통일은 한국 사회 구성원과 북한 사회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유사성과 동질성, 그리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동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 한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북한이 최소한 변해야 하고 갖추어야

할 영역과 수준 및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본 글의 목적이지만, 그 기준점은 누구라도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만 서로 유사성이 높은 사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통합에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서로 적대감을 갖기 보다는 호의적 입장을 갖는 것이 통일과 통합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남과 북은 단일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70년이 넘는 분단으로 인해서 이질성이 증가하고, 체제간 갈등과 반목도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그러나 북한사회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사회의 변화 모습이 통일한국의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한국과 국제사회는 협력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민족구성원 전체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요구된다. 민족구성원 전체의 안전과 자유, 행복을 깨거나 고통과 피폐를 초래하는 통일은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무력사용을 통한 전쟁과 강제 병합이 안 되는 이유다. 남과 북은 각각 이와 같은 방향으로 노력하고 접점을 늘려나는 노력을 기울이면 일정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만남과 통일이 찾아 올 것이다. 한반도 전체 구성원의 동의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져야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고 세계평화와 공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고 세계평화와 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통일 위해서는 북한도 변화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적어도 2개 국가 또는 영구분열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민족공동체의 발전이 보장되는 통일을 바란다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적극 수행해야 한다. 말하자면 북한 나름대로 통일의 준비를 해야 한다.

첫째, 북한주민들을 먹고 살게 해주고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통제와 폐쇄체제를 개방하고 경제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한다. 적어도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국제사회, 남쪽과 조건 없이 협력해야 한다.

둘째, 북한주민들이 사람답게 살도록 해주어야 한다. 근대 시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하고 주민들에게 선거와 직업 등 선택의 자유와 인권 보장이 주어져야 한다.

셋째, 북한도 민족공동체의 미래를 내다보고, 통일의 본령에 맞게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남한 주민에 대한 인권 존중과 인도주의 정신의 구현을 위해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납치 억류 금지 등에 있어서 실효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

북한이 진정한 통일준비를 추진할 경우 국제사회와 남한은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식량, 의약품, 농축산 기술, 기상과 재해 대비 기술을 지원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방법과 체제안전에 대한 위협감 해소, 경제개발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와 남한의 지원에 부응하여 남한 체제 인정 존중, 내정불간섭, 비방중상 중단, 파괴전복 금지, 무력침략 포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천명하고, 민족동질성 회복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실천해야 한다.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동의는 필요하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통일에 대한 합의와 실행은 한반도 구성원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 통일 친환경적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

통일은 남과 북 주민 모두가 함께 동의하고 추진해야 가능한 것이다. 일방의 추진과 선택에 의한 통일은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사회 문화적 통일은 요원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개방사회와 북한의 폐쇄사회는 근본적 차이를 갖고 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남한 주민들과 동일 수준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합리적 선택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에 대한 경험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남과 북이 현실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통일논의를 진행하고 실제 통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들에게 선택의 기회와 일정한 수준의 정보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결국 북한사회의 개혁과 개방을 통한 주민들의 시민의식 함양이 선결되고, 이를 위한 한반도 구성원들의 공동 노력이 활성화 될 때 한반도의 새로운 통일로 가는 길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발 표 3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
남북통일과 “한반도 역사의 종언”

이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I.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행방
II. 북한문제와 통일
III. 결론 : 통일을 통해 우리도 세계사를 쓰자

I.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향방

우리는 흔히 동아시아의 평화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 동아시아의 평화는 굵직한 틀에서 볼 때 세계의 평화와 직결되는 문제다. 왜냐하면 동아시아라는 지리적 개념이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크게 지리적 제약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구적 의미에서 지정된 지구의 동쪽, 특히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제정치라는 현상을 분석하곤 하지만 일반적으로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북한 등이 포함된다. 즉 온전한 지리적 개념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지리적 개념이 전혀 안 들어간 것도 아니다. 온전한 지리적 개념이면 동북아시아에서는 몽골이 들어가야 하고, 동아시아의 남쪽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특히 ASEAN 국가들이 들어가야 한다. 미국의 경우도 지리적으로는 동아시아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는 아니다. 반면 그렇다고 지리적 개념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도 아닌 것이 유럽

이나 중동,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지의 국가들은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행위자로 좀처럼 거론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국제정치란 무엇이고, 그 국제정치가 생산해 내는 의미는 무엇일까? 특히 동아시아의 평화를 생각할 때,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까? 동아시아 국제정치는 동아시아에만 머무는 것일까? 동아시아 평화는 곧 동아시아만의 평화일까? 동아시아의 평화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이고, 가장 평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있다면 무엇일까? 한반도 통일의 달성에 있어서 동아시아 국제정치는 어떠한 장애요인과 기회요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국제정치는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 것일까?

이 논문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변화한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지형과 또 앞으로의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가 동아시아 평화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존의 구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으로서 상당히 새로운 구상을 시도해 보고자하며, 또 역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어떠한 동아시아 국제정치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도 그려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라는 개념의 구분을 엄밀히 하지 않고 이 지역의 강대국 중심의 분석을 하고자 한다.)

1. 미국, 중국, 일본의 역학 변화가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불안을 가져오나?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은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핵심적인 국가들이지만 사실 모두 글로벌 파워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세계 1위의 국력을 가진 국가이고, 중국은 2012년 이후로 세계2위의 경제대국의 지위로 올라섰다.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으나 현재는 3위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기술력이나 인적자원, 선진적 제도 등의 면에서 보면 중국에 못지않은 강대국으로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 1, 2, 3위의 국가들이 동아시아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지역적 개념으로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로 한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들 국가 간의 국제정치는 동아시아 국제정치로 국한되기 보다는 세계정치로 보는 것이 훨씬 적절하다. 즉 지역은 동아시아이지만 그 국제정치의 영향은 세계적인 범위로 확산

된다. 이를테면 이들 국가들 간에 분쟁이 일어난다면 이는 동북아시아나 동아시아 분쟁이 아니라 세계분쟁이며, 그 안보적, 경제적 영향 역시 세계적인 영향으로 파급될 수밖에 없다. 물론 분쟁 자체를 동아시아 지역으로 한정하는 노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세계화로 연결된 전 세계가 이들 1, 2, 3위 국가들의 분쟁에서 분리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과도한 단순화의 위험이 있지만 현재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간략히 요약한다면, 부상하는 중국(Rising China),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일본(Declining Japan), 동아시아에서 서서히 발을 빼는 미국(Retreating America),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한국(Ambivalent Korea)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70년대 후반 다양한 부정적 예측을 보란 듯이 깨면서 1978년에서 2008년까지 평균 9.9%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개혁개방 초기 엉터리 통계라는 등, 곧 꺾어질 것이라는 등, 대 사회혼란이 올 것이라는 등의 매우 비관적 전망도 많았지만 중국의 경제성장은 후반기로 오면서 오히려 두 자릿수 성장으로 더욱 가속화했고, 산업구조도 2차, 3차 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선진국 형 산업구조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외환보유고도 2조 달러가 넘는 세계 최고의 외환보유고를 자랑하고 있다. 구매력기준 (PPP)으로 계산한 경제규모의 면에서는 2014년에 미국을 추월했다는 계산을 얼마 전 IMF에서 발표한 바도 있다. 2014년 경제성장률은 그간의 경제성장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세계경제가 거의 성장을 멈춘 현재의 국면에서도 7%에 근접하는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력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되는 한 중국의 국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조만간 국가 수준의 국력으로만 비교한다면 미국과 곧 대등해 질 것으로 전망하는 분석이 다수설이다.

한편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서 아시아로의 재균형(Rebalancing), 중심축의 아시아 이동(Pivot to Asia), 아시아에의 지속적인 안보적 투자(security commitment) 등의 수사를 써 오고 있으나, 전임 부시대통령 때의 군사적, 경제적 손실로 인하여 수사의 차원을 넘어서는 아시아 외교안보정책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과 중동에서의 대 테러전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피해 및 재정적 손실, 그리고 미국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미국의 버블 붕괴 및 경

제위기가 또 한 번의 경제적 충격을 주어, 사실 상 미국이 외교안보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물질적 재원은 매우 한정적이다. 국방예산도 계산에 따라 차이가 좀 있지만, 향후 10년간 상당 수준 (약 5천억 달러 삭감이 다수설)으로 줄여야 하며, 전통적으로 미국이 중요시해 오던 대유럽관계(Cross Atlantic Relations)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그리고 중동에서 ISIS를 위시한 테러문제, 이란 핵문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이라크 정정의 불안정 등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그간 구사해 온 수사와는 다르게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은 안보공약을 강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동맹국에게 안보 부담을 이전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일본의 해석개헌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Collective Self-Defense) 확보 움직임도 이러한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오바마 정권 이후의 정권도 민주당, 공화당 정권과 상관없이 이러한 미국의 추세에서 크게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서서히 발을 빼면서 그 안보부담을 동맹국에게 넘기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11년 3/11 후쿠시마 재난, 2012 경제규모에서 중국의 일본 역전 등을 경험하면서 상당한 자신감의 상실과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잃어버린 10년"은 10년을 훨씬 넘겼고, 한 때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던 전자산업 매출이 한국의 단일 기업인 삼성전자에 추월당하는 것을 보면서 일본은 자신감의 문제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의 문제, 청년 실업의 문제, 경직된 제도 및 문화에 대한 문제 등도 일본의 자신감과 위기의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다. 물론 이러한 일본의 자신감 문제는 "과장"된 면이 있으나 아베 정부의 적극적인 대외정책이나 역사 재해석 시도 등은 일본의 자신감 회복과 강력한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일본이 중국에 추월당한 상대적 쇠락은 단 시일 내에 역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에는 중견국, G-20회원국으로서 세계 기여 외교를 말할 정도로 국제무대에서 높아진 위상을 획득하고 또 추구하고 있지만 세계 3대 강국에 둘러싸여 외교안보적으로 활동 공간이 넓지 않은 편이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편을 선택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국내적으로 분열과 갈등을 노정하고 있고, 정부도 쉽사리 노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미국도 한국에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 쪽을 선택하라는 "전방위적인 압력"을 넣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중 관계 자체도 상호 배타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한국은 스스로 알아서 미중 관계 중 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 결국 겉으로 나타나는 외교 행태는 어느 쪽으로도 방향을 잘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국가 간의 역학 구도는 앞으로의 동아시아 국제정치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이중 현재 상대적으로 다수설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해석은 현실주의적인 지정학적(geopolitical) 해석이다. 역시 과도한 단순화의 위험이 있지만 이 해석은 몇 개의 비관적인 해석으로 발전한다. 하나는 중국의 부상 속에서 미국이 안보부담을 서서히 아시아 국가들에게 넘기게 되면 동아시아 지역에 중국의 부상을 감내할 만한 힘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즉 힘의 공백이 생겨나고, 이 힘의 공백을 일본의 군사화가 대체하게 된다는 해석이다. 이 경우 중국과 일본의 상호간 불신으로 인하여 영토분쟁 등이 군사적 충돌로 발전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하기도 한다.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일본의 핵무장으로 인하여 이 지역의 핵확산까지 예측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현실주의적인 해석은 미중 간의 충돌이다.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역사적으로 부상하는 국가와 내리막을 걷는 국가 간에는 충돌이 있어왔다는 주장이고 결국 중국의 도전에 맞서서 미국과 중국이 어떠한 형태로든 충돌을 하게 된다는 예측이다. 이 경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항하게 되고, 중국은 과거 같은 진영이었던 러시아 및 다른 상하이 협력기구 (SCO) 국가 등과 함께 미국에 대항하는 이른바 신냉전 구도를 상상하게 된다.

이러한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현실주의 못지않게 비관적인 또 다른 해석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념적인 구상을 상정한 비관론이다. 우선 중국의 부상과 관련하여 중국이 현재의 추세대로 발전하면 결국 미국을 뛰어 넘는 패권국이 될 것이고, 중국이 패권국의 지위에 도달하면 예전 조공체제를 부활하여 황제국의 지위를 추구할 것이라는 비관론이다. 즉 주변국과 일종의 종속관계를 설정하여 주변국은 주권의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중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간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불안을 느끼면서 과거 제국주의 시절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한다는 해석이 있다. 이 경우 중국과 일본 간에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하며 이러

한 충돌에 동맹국들이 휘말려서 보다 큰 규모의 전쟁으로 발전하리라는 전망을 한다.

물론 이러한 해석이나 시나리오는 상당히 극단적인, 즉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시나리오(worst case analysis)들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장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이지만 이 시나리오가 다수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이 강한 분석이고, 사람들은 생각에 의거하여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실제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이지만 다수설이 될 경우에는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2. 과장된 동아시아 불안정론

하지만 이러한 비관적인 현실주의적 해석은 그 예측의 근거가 상당히 잘못된 가정(Assumption)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전혀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발전된 사건들을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먼저 힘의 공백이나 세력전이가 국가 간 충돌을 가져온다는 주장은 보편적인 법칙이라기보다는 몇 개의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 과거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역으로 힘의 공백이 반드시 국가 간의 충돌을 가져오지 않은 사례도 많이 있다. 특히 국가 간에 신뢰가 구축되어 있고, 국가 간에 "적"이라는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힘의 공백이 있어도 무력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금 유럽에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후퇴한다 하더라도 프랑스와 독일 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고,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후퇴한다 하더라도 동남아시아의 강대국인 인도네시아와 태국 간에 무력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패권국가 간에 힘의 역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꼭 무력분쟁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19세기 말 미국과 영국 간에 힘의 역전이 발생하였지만 미국과 영국 간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 20세기 후반에 미국과 일본 간에 힘의 역전 가능성이 있었을 때도 전쟁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상당히 비현실적인 상상이었다. 19세기에 중국과 영국 사이에 실질적인 힘의 역전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힘의 역전이 있었는지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또한 중국과 영국 간에 전쟁이 있었다기보다는 유럽세력의 중국 침략이 보다 객관적인 사실이다.

중국이 조공체제를 기초로 하는 세계 패권국가가 된다는 상상도 매우 비현실적인 상상이다. 조공체제라 하면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확립되기 이전의 전근대적인 시스템이다. 농업경제가 기초인 전근대 경제는 경제성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였고, 따라서 약탈과 침략을 통한 토지의 획득과 노동력의 획득이 빈번히 이루어지던 시대였다. 조공체제는 따라서 이러한 불안정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패권체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시장을 통하여 원활하게 획득할 수 있는 체제에서는 굳이 불필요한 강제력과 반발을 동반하는 조공체제를 만들려는 노력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현재 중국의 경우 지금의 국제질서와 체제에서 고속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을 대부분 시장을 통해서 획득하고 있다. 조공체제를 요구하는 패권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의 체제보다 훨씬 우월한 이득을 중국에게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이해를 오히려 크게 훼손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일본의 경우에도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제국주의 국가로 돌아가는 상상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역시 매우 독특한 자본주의 경제의 단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우선 자본주의 생산과 소비를 `위해 필요한 시장과 노동력을 무력을 통해 획득하는 것이 당연시 되던 시기가 제국주의의 시대인데, 지금은 무력을 통하여 시장을 획득하고, 노동력을 획득하고, 자원을 획득하는 것이 세계시장에서 금전적 거래를 통해서 획득하는 것보다 훨씬 코스트가 클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허용이 되지도 않는다. 또한 강대국 간에 전쟁을 통해서 식민지를 획득하는 것은 핵무기로 인해 형성된 “공포의 균형”으로 인하여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19세기에 있었던 공격적인 민족주의가 횡행하고 있지도 않고, 또한 국가와 인종의 적자생존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미 제국주의의 폐해를 경험한 일본의 시민사회가 제국주의의 부활을 지지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일동맹 자체가 그러한 일본의 부활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비관적인 현실주의적 상상은 현실화 확률이 매우 낮은 “최악의

시나리오(worst case scenario)"일 뿐만 아니라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과 시대적 맥락을 가져와 21세기 적용하고 있는, 분석적으로 매우 정치하지 못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동북아시아에서 강대국 간 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이 매우 높지는 않지만- 위의 분석에 근거한 분쟁이 일어나기보다는 다른 변수가 더 중요할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변수는 북한 변수이고, 그보다 가능성이 낮지만, 작은 분쟁이 반복되고 쌓여서 그 과정에서 인식의 오류(misperception)가 발생하거나, 적대적인 정체성이 강화되어 큰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실제모습

이러한 돌발적인 변수를 제외하면 사실 상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 상황은 그리 비관적이지 않다. 오히려 상당히 낙관적이다. 이유는 1945년 이후 미국에 의해서 구축되어온 세계질서가 강대국들에게 윈윈게임(positive sum game)의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작은 개별 이슈에서 제로섬 게임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한 이슈들이 국가 간의 전체적인 제로섬 게임으로 발전하기가 매우 힘든 구조가 되었다. 우선 미국이 1945년 이후에 구축한 세계질서의 특징은 원하는 것을 세계시장을 통하여 비무력적인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분쟁의 해결을 무력이 아니라 다자주의적 제도(Multilateral Institutions)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무력적인 방법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그러한 해결의 코스트가 다자주의적인 해결을 통한 코스트보다 훨씬 높은 구조를 만들었다. 이를 학계에서는 "자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라고 하는데, 핵심은 개방적인 자유시장경제와 다자주의에 있다. 미국의 학계에서는 이 질서 안에서 "민주주의"의 확산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국가의 정치체제가 꼭 민주주의가 아니더라도 개방적인 자유시장경제를 가지고 있고, 다자주의를 따르는 한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와 같은 권위주의지만 개방적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한 국가와 중동의 왕정국가 중 개방적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한 국가들을 들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은 정치체제의 형태와 관계없이 개방적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고, 또 다자주의를 존중하는 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위배되는 국가로 분류되지 않으며, 또 국제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으로 분류

되지도 않는다. 즉 이들 국가들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안정 세력도 아니고 국제체제 도전국가도 아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시각에서 볼 때,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각각의 정치체제 형태와 상관없이 체제도전세력과 불안정 세력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아무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붕괴시키고 조공체제와 같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으며, 현재의 개방된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다자주의를 조금씩 개선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는 것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기도 어렵다. 이미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을 통하여 주장되었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대체할 수많은 대안들은 모두 실패하였고, 당분간 훨씬 우월한 대안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은 공산당 일당이 지배하는 권위주의 국가이지만 싱가포르나 중동의 왕권 자본주의 시장경제국가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국제질서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또 발표되는 경제정책이나 구상들이 이러한 국제질서를 오히려 강화하는 정책과 구상들이다. 최근 중국이 추진하는 국내경제정책들은 여타 선진국들이 밟아왔던 길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FTAs),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실크로드 구상 등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보완하는 정책과 구상들이다. 즉 경제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군사력도 확대되고 있지만 강대국 간에 무력분쟁이 일어날 소지는 발견하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에도 아베 정부가 들어와서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발언과 행동, 구상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의 정책들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정책을 발견하기 어렵다. 개방된 자유 시장경제를 일본은 줄곧 고수해 왔고, 다자주의 국제관행과 제도를 벗어나 일방적으로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지도 않는다. 해석개헌을 통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고 있으나 기존의 국제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기 위하여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내정치적으로 역사해석을 새롭게 하고, 몰역사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지만, 무력으로 역사해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센티브를 갖고 있는 나라는 동북아시아에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중국의 부상이 어떠한 형태로 발전할지, 그리고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어떠한 도전을 할지 우려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중국과 기본적인 통상관계나 인적, 문화적 교류에 있어서는 중국과 깊이 교류하면서도(engagement policy), 군사적으로는 만일에 대비하여 다양한 안전조치(hedging)들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조치는 중국의 팽창이 기존의 국제질서를 뒤흔드는 팽창이 되지 않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넘어서서 예방전쟁(preventive war)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은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하고 다자주의 질서를 옹호하는 세력이지만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여 무력 공격을 시도한 예는 1945년 이후 단 한 건도 없었다. 사회주의적인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다자주의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국가가 아닌 한 미국의 국가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미국의 국방부가 중국에 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중국에 적대적으로 대결을 추구하고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즉 동아시아에서 미국, 중국, 일본, 세계 3대 강대국은 모두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깨뜨릴 이유를 갖고 있지 않으며, 그 질서 안에서 지금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또한 이들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구상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 국방부의 헷징이나, 일본의 역사 인식, 그리고 미일동맹의 헷징 전략만을 보고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의 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거나, 미중 사이에서 어느 나라를 선택해야 하느냐를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 상 이들 강대국들은 서로 헷징을 하면서 모두 시장과 다자주의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국가들이다. 즉 기존의 질서가 붕괴되지 않게 조심하면서 그 질서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쟁관계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한국이 굳이 어느 편을 선택해야 하느냐의 고민을 하기 보다는 우리도 기존의 질서를 지키고, 또 그 질서를 활용하여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기존질서 수호를 위한 헷징을 하고, 다른 부처는 중국, 일본, 미국과 깊이 교류하고, 외교부는 외교적으로 동아시아 및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면 된다, 시민사회는 열린 국제질서에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교류할 것이고, 국가는 자국 국민에 부당하게 피해를 입거나 이들이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

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다수설인 현실주의적 비관론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힘의 역전 및 힘의 관계 변화와 상관없이 매우 현상유지적인 방향(Status Quo)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정학이나 역사해석의 이유로 무력분쟁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통제되지 않는 경우의 수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진정한 불안정 요소는 강대국 관계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

II. 북한 문제와 통일

1. 통일과 동아시아 국제정치

우리는 흔히 동아시아의 가장 큰 불안정 요인을 미중관계나 중일관계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실제로 가장 현실적인 불안정 요인은 바로 북한의 변화에 달려있다. 북한의 변화는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도 있지만 부정적인 방향의 변화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변화를 한다면 이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이다. 하지만 북한의 정권이 통치능력을 상실하고, 체제에 대한 도전세력이 등장하는 변화라면 이는 정정불안을 야기하는 매우 부정적인 변화이다. 북한의 붕괴나 아니면 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위기를 조장하는 매파의 등장도 매우 부정적인 변화이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물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국가로서 국제사회, 즉 위에서 말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로 편입되는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북한 정권 자체가 아무리 잘못된 정권이라도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강경책을 고수하여 긴장의 수위를 높이는 대북정책은 우리가 예측하고,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하여 최대한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이 붕괴하게 되면 붕괴 이후에 발생하는 군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도주의적인 문제, 그리고 평화유지 및 핵 제거의 문제와 붕괴 이후 남북관계 처리 문제 등으로 동북아시아 국제정치는 요동을 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국제정치적 혼란이 잘못하면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자체의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는 이를 이용하려는 세력들로 인하여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북미관계, 북일관계, 미중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 등 다양한 관계로 긴장의 전선이 이동하게 되어 역시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불안요인으로 이어진다.

북한문제는 동북아시아 강대국 관계와는 달리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편입되지 않은 국가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의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핵무기 사용 혹은 핵물질 확산의 가능성도 실재하고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일 강대국의 한반도 개입으로 인하여 강대국 간 충돌이 일어난다면 이는 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세계정치 전반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북한문제를 잘 처리해 나가야 하겠지만 현재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치는 국가 간 해법이 충돌하고 있고 그러한 해법 중 하나가 북한을 강제적으로 고립시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서 만일 북한이 이에 대해 핵개발의 가속화로 대응하게 되면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돌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북한문제의 해결은 한반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동북아시아만의 문제도 아니고, 세계정치 및 경제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문제의 해결방향은 어떠한 것일까?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은 남북통일을 달성하여 북한문제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통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그로인한 남북 간의 평화공존기간이 필요한 것이어서, 통일 이전단계에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구상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문제 해결은 우선 무력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다른 모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국제질서 안으로 북한을 편입시키는 방향을 택해야 한다. 무력을 통하여 자유주의 국제질서 안으로 국가를 편입시키는 정책은 민주주의를 무력으로 이식하려고 하였던 미국 부시정부의 실패사례를 통하여 그 위험성과 무모함이 증명되었다. 한편, 자유주의 국제질서 밖에서 북한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북한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북한문제 해결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앞에서도 논의하였지만, 우리가 여기서 착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로의 편입은 꼭 민주주의를 동반한 편입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와 중동의 왕정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체제를 개방적 자유시장경제로 전환하고, 국제사회의 다자주의를 따른다면 북한이 꼭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 안의 국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2. 평화공존 단계의 구체적 설정과 새로운 통일방안 : 북한의 자유시장경제화와 중립화 방안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통일방안에 더해서 새로운 통일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것은 통일 전 단계에서 북한의 싱가포르식 혹은 UAE식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국제정치적으로는 북한의 스위스 식 중립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개방을 통하여 북한이 안정적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편입되고 대신 북한 핵의 포기를 받아내는 한편, 이러한 북한과 일정기간 평화공존의 단계를 거쳐서 남북한 경제통합,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치적 통일을 이루어 내는 단계를 밟는 것이다.

즉 (1) 북한에 대해서 권위주의적이지만 개혁개방과 중립화를 유도하고 그 이후 (2) 일정기간 남북한 평화공존을 거치면서 경제통합을 이루어내고, (3) 북한의 경제수준이 남한의 경제수준에 근접해 질 때 최종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물어 남북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통일방안은 기존의 통일방안과 달리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 만일 북한이 권위주의적인 정권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중국이나 싱가포르같이 우리와 자유롭게 교역을 하고, 인적, 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다면 이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안에서 남한과 북한이 평화적인 공존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만일 급속한 남북한의 교역과 교류가 남한과 북한에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면, 북한은 우선적으로 다른 국제사회와의 교역과 교류를 늘려나가고 어느 정도 개방적 경제체제가 자리를 잡으면 그 이후 남북 간의 교역과 교류를 늘릴 수 있다.

둘째, 북한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편입되게 되면 미국이나 서방세계의 체제변혁 압력은 급속도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 일본과의 국교수립도 가능하게 되어 정권안보와 핵을 교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 유럽에서 오랜 기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와 같은 중립화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것이며, 김정일도 스위스식 중립화 통일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어 북한의 중립화에 대하여 북한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립화를 하게 되면 북한이 평시 및 전시에 어느 쪽으로도 속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북한을 놓고 강대국 간에 대립이 이루어질 가능성 역시 낮아진다. 더욱이 북한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불신을 가지고 있어 중립화를 인정받는다면 정권 안보가 증진되고, 그에 따라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넷째, 북한의 중립화는 한반도에 버퍼존(buffer zone)을 세우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와 남북한 간뿐만 아니라 강대국 간의 무력충돌 가능성도 낮추어 준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관련 국가들의 이해가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통일 한반도가 중립화가 되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북한만이 중립화되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평화공존이라는 일정기간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남아있을 수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 중립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한미동맹 및 미일동맹이 안정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 내에서, 그리고 한미관계에서 한미동맹의 존속여부를 둘러싼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여섯째, 북한이 개혁개방을 한 이후 통일을 하게 되면 남북한 간의 위화감이 훨씬 줄어들 것이고, 남북한 간 경제격차가 줄어든 이후에 통일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어서 통일에 대한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거부감이 줄어들 것이다.

III. 결론 : 통일을 통해 우리도 세계사를 쓰자

우리가 읽고 있는 세계사는 “남이 쓴 세계사”이다. 하지만 유럽의 선진국이나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읽는 세계사는 자신들이 만든 “자신들이 쓴 세계사”이다.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세계를 움직여 왔고, 자신들의 운명을 자신들이 개척하려 한 세계사이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항상 남에게 의존하여 역사를 써 왔고, 지금도 그러한 관성이 많이 남아 있다. 북한의 핵문제도 그렇고, 통일의 문제도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 국제정치라고 부르는 동학은 사실 상 세계정치의 동학이며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이들 국가들의 관계에 국제정치적으로 긍정적 공헌을 하게 된다면 이는 세계정치적 공헌으로 평가될 수 있다. 즉 우리가 세계사를 쓰는 것이다. 물론 세계 3대 강국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약소한 대한민국이 이들 국가들의 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 군사력 및 경제력, 그리고 소프트 파워에 있어서도 아직 지역문제의 해결사로 등장할 역량이 충분치 않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판을 바꿀, 이른바 game changer가 되는 대 사건이 있다면 이는 중국의 부상이나 미국의 상대적 쇠퇴, 혹은 동북아시아 역사 분쟁이기 보다는 남북한 관계 개선과 통일이 될 것이다.

앞에서 분석하였지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또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세계사를 쓰고자 한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보다 북한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바로 그 길이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은 미국, 중국, 일본의 갈등이 최대 위협요인이 아니다. 이들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도 있고, 역사와 관련하여 해석이 다른 사안들도 있지만 결국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체제 수호세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화와 번영을 해치는 무력 충돌의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반면 북한은 자유주의 국제질서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한 이른바 “불량국

가” 범주에 속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을 변혁시켜 자유주의 국제질서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변혁의 방법이 무력일수도 있고, 평화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편입시키고, 북한 핵을 포기시키면서 동시에 남북한 간의 경제적, 문화적, 정체성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북한의 중립화 및 개혁개방, 그리고 핵포기를 유도하고, 남북한 간의 격차가 줄어들 때까지 일정기간 평화공존과 경제통합을 추진한 후, 최종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함께 가는 통일을 실현하는 새로운 단계적 통일 방안을 구상해 보았다. 이러한 구상이 잘 진행되어 평화적인 핵포기와 북한의 개혁개방, 그리고 최종적으로 통일이 실현된다면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말한 “역사의 종언”이 조금 변형된 형태이지만 동아시아에도 결국 찾아올 것이다. 후쿠야마가 말하는 역사의 종언이 실제로 역사의 종언이 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최소한 국제정치의 장에서 당분간 개방된 시장경제와 다자주의를 대체할 더 우월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후쿠야마가 말한 역사의 종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마지막으로 새로운 대안을 찾는 모색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국제정치에 있어서 동아시아에서의 역사의 종언은 자유시장경제와 다자주의로 특징지워지는 국제질서를 마지막으로 새로운 대안을 찾는 모색이 상당기간 중단됨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조금 변형된 형태이지만 역사의 종언이 시작될 때 바로 그러한 동아시아 역사의 종언이 시작될 것이고, 이는 곧 한반도 통일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다.P

토 론 1

통일로 가는 길: 한국 사회의 통일준비

왜 통일을 준비해야하나!?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정책실장

왜, 통일을 준비해야 하나!?[1)]

I. 변화와 위기에의 적응과 대비

1. 세계질서의 격변

● ‘불안의 시대(an age of anxiety)’ 진입

- 세계는 2008년 9월 미국發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자유시장경제와 미국파워로 지탱했던 ‘낙관의 시대(1990~2008)’가 ‘불안의 시대’로 전변(래치먼, 2011).
- 특히, 동북아는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과 군비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아시아 패러독스(Asia’ s paradox)’정세에 놓여 있음.

※ ‘아시아 패러독스(Asia’s paradox)’: 동북아시아의 한·중·일 3국의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높아지는데 반해, 영토·역사분쟁 등과 같은 정치·안보 측면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동북아 국가 간의 상황

1) 본 토론문은 토론자의 사견이며, 여의도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 ‘G-zero’세계

- G7은 무의미하고, G20은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으며, UN이나 IMF, IBRD 등의 국제기구들 또한 리더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미국파워의 약화로 인한 중국의 급부상에도 G2(미·중)가 세계를 이끈다고 보기도 어려운 오늘날은 그야말로 리더가 사라진 ‘G0’세계(브레머, 2012).

2. 새로운 위기의 도래

● 세계질서의 격변과 함께 지구적 차원에서 3대 위기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또한 예외가 아님.

●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위기

-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 · 고령화 현상으로, 2030년 초고령국가 진입 예상

※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국가는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3개국

-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는 생산인구 감소와 함께 노동생산성 하락을 초래,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임.

※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정책 수요예측모형(NARS21)’을 통한 추계 결과, 대한민국은 작년 출산율(1.19명) 지속時 2136년에는 인구가 1,00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

● 기후변화 위기

- 기후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다가오면서 삶의 방식과 삶의 영역을 급격하게 변경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기후변화의 예외지역이 아님.

※ 2012년 1년 동안 기록된 기상이변: 평년보다 3.4도 이상 낮았던 2월 한파, 30년 이래 최다 강설,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43%였던 5월 가뭄, 1994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던 7월 폭염, 평년 대비 87% 많았던 8월 집중호우, 사상 처음 한 달새 한반도에 상륙한 3개의 9월 태풍 등

- 기온이 상승하면서 한반도 근해에 난류성 어종이 급증할 뿐 아니라 植生의 북상 또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1930년대에 연간 146만톤 잡혔던 명태가 2007년 이후 1톤 미만으로 급감한 대신 고등어, 오징어, 멸치 등 3개 난류성 어종이 전체 어획량의 절반 차지

● 자원전쟁 위기

- 에너지자원은 오래 전부터 국가간 이해관계를 결정하는 핵심변수가 되었으며, 21세기 냉전은 원유, 천연가스, 광물과 같은 자원문제에서 비롯될 것임.

※ 2013년 세계 9위의 에너지 소비국, 세계 4위의 에너지 수입국, 에너지 수입의존도 96%가 대한민국의 자원 현실

- 기후변화와 인구증가로 인해 곡물을 비롯한 먹거리 자원의 가치가 치솟으면서 식량자원을 둘러싼 글로벌 전쟁 확산
-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문제와 함께 물 부족과 수질오염으로 인해 안전하고 충분한 물의 확보가 인류의 화두가 되고 있음.

※ OECD의 〈2050 환경전망〉은,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가용 수자원 대비 물 수요 비율이 40%를 넘는 '심각한 물 스트레스' 국가로 선정

II. 통일 준비 : 통일 발상의 전환으로부터!

1. 통일론(인식)의 진화

● 북한문제를 우리의 '한반도/한민족문제'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

- '실패국가(failed state)'인 북한의 존재가 우리에게는 안보 위협요인이므로, 북한문제를 '우리문제'로 접근하는 자세

※ 오늘날 全세계 약 141개국이 실패국가이며, 이는 세계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통일은 한반도의 비정상을 극복하는 궁극의 길이며, 한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근원적 처방(박근혜대통령)
- 통일 · 대북정책을 미래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공영 · 복지를 위한 '한반도 · 한민족 경영'의 관점에서 통합적 전략과 정책으로 접근

- 북한문제를 '우리문제'이면서 '한반도/한민족 문제'로 인식하여 북방으로 향한 '한반도 경영'의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및 유라시아-태평양 시대를 여는 원동력의 관점에서 정책과 전략 추진

● 남북 共進化(coevolution) 통일론으로의 전환
- 앞으로 달성할 통일은 단순히 민족과 국토를 하나로 복원하는 '再통일(re-unification)'이 아니라,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사회적 시장경제가 한반도 전역에 실천되는 새로운 통일국가가 건설되는 '新통일(neo-unification)'임.

※ 연합제·연방제 등 통일정부 구성방법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통일논의를 벗어나 통일국가 건설론으로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진화 필요
-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진화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경제적 기능주의로 접근한 EU 통합이 더 이상 한반도 통일모델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우리의 통일은 북한이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거쳐 체제진화로, 한국은 시장경제체제의 진화를 거쳐 남북이 공동 진화하는 통일을 지향
- 북녘동포들이 '이등국민'으로 느끼지 않는 통일 추구
- 한반도는 하나의 생태축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호 영향력이 지대한 현실을 감안, 자연안보(natural security)와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위한 남북한 공조적 자세 견지

2. '중견국가(middle power)' 역량에 걸맞는 국가전략 구사

● 세계 15위권의 종합국력을 가진 '중견국가' 반열에 속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에 걸맞는 '독자적 국가전략' 수립

●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은 '분단번영'의 최고치에 있으며, 이후 '3대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전역의 발전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新통일국가 창조'를 핵심과제로 삼는 국가전략 필요

III. 통일국가의 목표(방향)

● 한반도 차원: 평화적 방법으로 新통일국가 건설

- 21C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사상 처음으로 자유 · 인권 · 행복권을 가진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통일국가를 창조하는 '新통일'
- 새로운 통일국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며, 이를 위해 남한은 체제진화를 그리고 북한은 체제전환을 거쳐 체제진화라는 남북 共進化(coevolution)를 통한 체제통합을 이룸으로써 가능

- 광역분권형(연방제) 국가체계의 전향적 검토

• 남북 1:1 연방제는 상이하고 적대적인 체제 사이의 이념적·헤게모니적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울 뿐 아니라 21세기 국가발전전략에도 맞지 않음.

• 통일국가의 운영체계는 도시중심의 多주체 발전전략에 따라 '광역분권형(연방제) 국가체계'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음.

● 동아시아 차원: (복합)네트워크 허브

- '아시아 패러독스'현상을 보이는 동북아는 경제통합을 통한 공존과 평화가 아니라 경제발전이 군비경쟁과 갈등으로 치닫는 반대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므로,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반도의 역할이 지대함.
- 한반도가 지역안정과 통합을 위한 중재자 및 조정자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리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네트워크공동체를 성공시킬 수 있는 동아시아의 평화 · 공영 · 조화의 복합네트워크 허브 지향

● 세계 차원: 유라시아-태평양시대의 원동력

- 통일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의 관문으로서 유라시아-태평양 시대 개막을 추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
- 유라시아-태평양 시대의 개막은 한반도의 공진화 평화통일을 촉진할 뿐 아니라 통일과정에서부터 한국이 분단번영의 한계를 뛰어넘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

IV. 결론에 대신하여:
미래를 설계할 역량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 50년, 100년의 미래는 지정학을 바탕으로 구도를 구상할 수 있으나, 10년의 단기 미래는 정치지도자의 역량에 결정적으로 의존

● 특히, 변화하는 세계환경에 부응하는 '창의적'세계전략 구상 및 구사 역량이 매우 중요함.

- 동북아의 패권질서와 균세질서의 선택과 활용을 통한 국익전략을 기획하고 구사하는 역량이 중요하며, 특히 중국의 패권추구를 견제하고 미국의 균세추구를 적극 활용하는 用中 · 用美의 외교역량 필요
  아울러, 통일외교 역량, 대북협상 역량, 국민적 지지 결집 역량 등의 겸비가 필수적.

토 론 2

통일로 가는 길: 한국 사회의 통일준비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평화협력과 제도개혁의 과제

성경륭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평화협력과 제도개혁의 과제

I. 남북한의 현 상황: 교착의 파국적 결과

조민 박사는 발제문에서 현재의 분단평화가 지니고 있는 한계와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 "통일평화"를 새로운 전략기조로 제시하며, 통일평화를 "평화를 위한 통일"과 "통일을 위한 평화"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 입각하여 조 박사는 연방주의 국가모델과 사회국가 모델을 통일한국의 국가모델로, 공정한 시장경제와 협력적 공유사회를 경제사회 모델로, 관용과 협동의 문화를 통일시대의 문화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남북한이 각자 안고 있는 자신의 내부적 한계를 넘어서면서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대담한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현재 남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은 그런 대안 모델을 논의하기에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 사이에 과도하게 이념적·대결적 관계가 조성되었고, 이것이 남북관계의 평화적 전환은 물론 통일로의 질적 도약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현재 조성된 안보 딜레마 상황은 남북한 정부가 군사적 무장과 대치 이외에 다른 어떤 정책적 선택도 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 속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한은 한미동맹에만 매달리고 있고,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정치적 타결을 목표로 자신의 위협능력을 고도화하는 위험한 게임을 지속하고 있다. 그리하여 남한 정부가 평화노선을 접고 대결노선을 채택한 이후 남북관계는 더욱 군사적 위험이 증가하고 주변 강대국의 개입 여지가 높아지는 역설적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II. 남북관계 기조의 전환: 평화협력 노선의 복원

북한 정권이 자신의 체제 안전과 대외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핵무기와 미사일 체계를 개발하는 데 대응하여 남한 정부가 대결노선과 봉쇄노선을 채택하면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군사적 안정과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가?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종합하면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남한 정부가 대결노선을 채택한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것이 국내외의 공통된 평가이다. 또한 남한 정부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의 공간은 현저하게 협소해졌고, 그에 반비례하여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규정력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면, 이명박 정부 이후 남한 정부는 얻은 것이 거의 없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억제하고자 했던 북한의 군사적 위험은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의 상황 타개 능력은 극소화되었다. 국제정치적 자율성은 대폭 축소되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이후 한국의 보수정권이 채택해온 봉쇄 위주의 대결노선을 중단하고 평화협력 노선을 신속히 복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할 때에만 평화와 협력을 지렛대로 우리가 원하는 북한의 핵개발 동결과 점진적 비핵화를 이룰 수 있고, 국제정치 영역에서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최대화하여 우리의 운명을 강대국의 결정에 내맡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대북전략의 전면적 전환을 이루면 군사적 안보는 물론 평화통일의 전망을 새롭게 되살릴 수 있다. 남북한이 함께 살고 공동 번영할 수 있는 통일한국의 새로운 국가모델, 경제사회모델, 문화모델은 바로 이런 국가전략의 대전환 속에서 논의되어야만 할 것이다.

III. '소프트 파워'로서의 연방주의 국가 모델

남북관계의 기조를 평화협력 노선으로 전환하여 한반도 통일을 추구한다고 할 때, 우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전제는 남한의 현 체제가 (비록 내부의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북한보다 훨씬 우월한 체제라는 점과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을 압도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제에 기초하여, 우리는 지속적으로 남한의 내부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북한의 주민들도 매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국가모델과 경제사회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만약 우리가 지금보다 더 향상되고 더 매력적인 체제모델을 수립해나간다면, 그것은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마음으로부터 자발적 동의와 수용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소프트 파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동서독의 통일에서 보는 것처럼, 동독 주민들은 민주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로 구성된 서독의 국가와 경제사회 시스템을 동경하고 동서독의 통일을 강력하게 염원하였다. 바로 이런 동경과 염원이 체제대결이 첨예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강대국의 개입이 예상되는 일촉즉발의 순간에 동서독의 통일을 이끌어낸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한 바 있다. 이것을 보면 소프트 파워는 하드 파워의 한계를 넘어서고 또 보완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주제가 연방주의 국가모델이다. 무엇보다도 이 모델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수직적 분권화와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한 자치를 강조한다. 이렇게 할 때 주권자의 민주적 권리 행사가 주권자의 삶의 현장에서, 나아가 국가 공동체 전체의 차원 모두에서 가장 실효성 있게 구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연방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남한 내부의 국가구조는 분권화와 자치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외형적 민주화와 지방자치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이 과도하게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지방정부와 생활현장은 주권자가 주권행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권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방주의를 남북관계에 적용하면, 연방주의는 분권과 평화를 보장하는 매우 긍정적 조직 원리로 작용한다. 원래 하나의 단일국가로 존재하던 남북한이 해방 이후 분단된 두 개의 독립국가를 이룬 상태에서 전쟁과 군사적 대결을 겪었으므로 전쟁이나 흡수통일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경우 연방주의는 거의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 다만 통일의 기회가 갑작스럽게 찾아와 빠른 시간 내에 분립된 두 국가가 하나의 통일 연방 국가를 형성하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평화협력 노선에 입각하여 상호합의를 통해 통일 연방 국가를 구성하는 것은 남북한의 1+1의 국가연합 단계를 거친 다음 통일 연방 국가를 구성하는 순서를 거칠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통일 연방국가의 구성단위를 몇 개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북한은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전체주의 국가체제를 유지하면서 남북한이 1+1의 연방 국가를 구성하자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제안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제안은 주권자의 민주적 결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반민주적 제안이다. 또한 이 제안은 두 개의 단위를 기초로 연방 국가를 구성할 경우 통일 이후 연방체제의 내부 통일성 미비(예, 통일 군대의 지휘권 등)는 물론 어느 한쪽이 비토 파워를 행사하거나 연방에서 이탈할 경우 연방국가 체제가 쉽게 붕괴될 수 있는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통일 연방국가의 구성단위는 남한의 17개 광역정부와 북한의 12개 광역정부를 기본단위로 하되 남북한 각각이 대도시와 주변 광역을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18～20개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방주의 원리를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국가의 수립에 적용할 때에도 이

원리는 남북한 내부의 지속적인 개혁은 물론 남북한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견인하는 강력한 추동력을 발휘한다. 특히 체제경쟁에서 뒤쳐지고 경제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통일 연방국가에 참여할 경우 주민과 지역의 민주적 결정권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통일 이후 최대한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통일과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연방주의는 남북한 내부의 민주화와 분권화를 견인하고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매우 효과적인 국가조직 원리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IV. 대안적 경제사회 모델

북한과 비교하여 시장경제와 다원적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는 남한의 경제사회 모델이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만큼 자명하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시장경제는 경제적 강자인 재벌집단이 주도하고 있고, 외환위기 이후 분배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회적 불평등이 제어하기 힘든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통일국가 수립을 무결점의 한국 모델을 결점 투성이인 북한사회에 덮어씌우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변증법적 지양과 도약을 통해 남과 북 모두가 자신의 결함을 극복하고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삶과 경제사회적 삶을 실현하는 것으로 통일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통일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흡수하거나 끌고 가는 통일이 아니라 남북한이 모두 각자의 결함을 치유하면서 상대를 끌어안는 공생의 통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조민 박사가 공정한 시장경제와 협력적 공유사회를 강조하고, 협동과 관용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도 모두 통일을 상호 치유와 공생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데서 자연스럽게 제시된 것이라고 보고 그 중요성에 공감하는 바이다.

토 론 3

통일로 가는 길: 북한의 통일준비

김영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한이 통일 준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설파한 발제자 의견에 공감한다. 통일 이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무엇을 설정하고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에 이견이 없다.

다만, 우리의 희망을 북한에게 아무리 얘기한들 소용이 없단 점이 문제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북한의 통일준비〉를 통해 통일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북한 스스로 이렇게 통일준비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는데 머물지 않고, 북한이 우리가 바라는 통일준비를 하도록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더 얘기하고 고민해야 한다.

북한 당국이 우리가 요청한다 해도 발제자가 제안한 〈남한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보장 선언〉을 쉽게 들어줄리 없고, 〈북한주민의 생존권과 생명권 보호〉를 우리가 희구하는 수준으로 실천할리도 없다. 더욱이 〈법치와 준법의식〉, 〈합리적 선거제도와 시민사회 영역 존중〉, 〈보편적 국제적 기준 적용의 확대〉라는 통일준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 또한 매우 낮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요구하면 그들은 이미 자신의 기준에 맞게 실행하고 있으니, 간섭하지 말라는 늘 듣던 얘기만 할뿐이다. 이것이 분단 이후 우리가 경험한 남북관계 현실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이 통일 준비를 하도록 어떻게 접근하고 노력해야 하는가를 다시 성찰하는 것이다.

첫째 필요한 것은 북한이 지금과 다른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이 북한 통일준비의 첫 단추다. 현재와 같은 지도자와 체제작동원리로는 〈드레스덴 선언〉 실행은 시작조차 어렵다. 북한변화가 일어나도록 추동하거나 변화를 유도하는 다양한 방안이 실행되어야 한다. 그 결과 북한 사회구성원이 북한체제를 지금과는 다르게 작동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통일준비라는 말을 꺼내 볼 수 있다.

둘째, 발제 내용에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주민이 우리가 원하는 통일구상과 로드맵을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통일준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준비'와 맞아떨어져야 통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통일비용

도 줄어들고, 통일 부작용 및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셋째, 북한주민이 '민족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통일은 대한민국과 한다는 점을 북한주민 스스로 천명하고 우리와 함께 통일을 모색하는 것만이 중국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고 주변 강대국의 통일 방해를 막아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북한주민들이 원하는 사회와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동독 주민들이 서독과의 통합을 원했듯이 북한주민 스스로 대한민국과의 통합을 원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제대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끝으로 통일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삶과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는 '통일 상상력'을 만들어 전해주어야 한다. 또 남북한의 차이가 차별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미리 전해주어야 한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만들어 북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해 줄 때 비로소 북한의 통일 준비는 의미 있게 전개된다고 본다.

결국 오늘 심포지엄에서 논의할 핵심은 '북한의 통일준비'를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북한의 통일준비'를 성찰하고 고민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토 론 4

통일로 가는 길: 북한의 통일준비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I. 필자의 전제

□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전제들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통일의 결과가 구성원들에게 상호 호혜적 이익과 만족감, 그리고 기대감을 갖도록 해주어야 함. 이것이 통일로 가는 새로운 길이 되어야.
- 북한의 통일준비는 통일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북한사회가 어느 수준에 도달했을 때 통일이 가능할 것인가를 제시
- 서로 유사성이 높은 사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통합에 유리. 또한 서로 적대감을 갖기 보다는 호의적 입장을 갖는 것이 통일과 통합에 유리

II. 필자의 제언

□ 필자는 이러한 전제 하에 다음 7가지 준비 사항을 제시

- 1) 한반도 구성원의 자유로운 선택과 동의에 의한 통일, 2) 남한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 보장 선언, 3) 북한주민의 생존권과 생명권 보호, 4) 법치와 준법의식, 5) 합리적 선거제도와 시민사회 영역 존중, 6) 보편적 국제적 기준 적용의 확대, 7) 핵과 대량살상 무기 감축 및 폐기

III. 평가 및 검토 사항

□ 그동안 통일준비 논의에서 우리의 통일준비만을 다루어 왔을 뿐, 북한의 통일준비에 대해서는 간과되어 왔음.

이런 점에서 윤 박사님의 연구는 새로우며, 통일준비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혔을 뿐 아니라 “한반도 구성원의 자유로운 선택과 동의에 의한 통일”등 우리가 공유해야 할 원칙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통일논의에 크게 기여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은 좀 더 고민하고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인권, 정치, 군사 관련 요인들 중심으로서 북한의 준비를 나열. 그러나 어떤 요인이 보다 핵심적인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인들 간 체계화가 필요하며, 상호 유사성 및 호의적 입장을 고려할 때, 여타 경제, 사회적 요인들도 포함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1) 한반도 구성원의 자유로운 선택과 동의에 의한 통일"은 북한뿐 아니라 남한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른 요인들과 다른 차원에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예를 들어 '대전제'로 설정

▹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심각하여 통일논의에서는 빠질 수 없는 주제.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 상호 유사성 및 호의적 입장을 갖게 하려면 경제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또한 북한 사회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통일이 가능할 것인지? 에 대한 설명은 없음

■ 둘째, 북한의 준비를 우리의 입장과 기대에 근거하여 제시. 그러나 통일은 상대가 있는 것이며, 특히 필자가 상호 호혜적인 관점을 견지한다면, 제목에서 제시된 것처럼 북한의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

▹ 1)~7)까지 우리 입장에서는 타당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도 타당한 것인지? 예를 들어 어떤 전제 없이 핵과 대량살상 무기 감축 및 폐기가 가능한 것인지?

▹ 따라서, 북한이 나아갈 길이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북한의 준비라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들을 어느 정도는 제시해주어야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보임.

토 론 5

통일로 가는 길: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논문이며, 상당부분의 논지에 공감

-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소련을 비롯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변 열강이 통일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 1장에서 "동아시아에서 서서히 발을 빼는 미국"이라는 평가는 아시아로의 회귀 및 리밸런싱을 추구하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과 다소 다른 해석으로 보여짐임

-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과 대만을 편입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안보적 틀을 형성하는 경향.
- 미국은 해외 군사력 60%의 아시아 재배치 계획에 따라 중동에서 점차 손을 떼고, 군사력을 일본과 호주 등의 기지로 이전하는 준비를 시작.
- 한국, 일본, 그리고 호주와 양자동맹 강화, 아태 다자경제협력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을 본격화.
- 현재의 상황은 시퀘스터 등 미국 내 재정 문제로 인한 잠정적인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아시아 중시정책의 약화 및 근본적 변화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중국의 부상 문제도 보다 세밀한 판단이 필요, 향후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대국화 여부는 아직 미지수

- 시진핑의 반 부패개혁은 중국의 자기 완성적 노력이라기보다 권력투쟁의 성격.
- 홍콩민주화 시위에서 나타나듯이 중국의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불균형 문제 부각 가능성.
- 농민공 문제 등 중국내 불평등 문제 심화 가능성, 중국의 성장잠재력도 점차 약화하는 경향.
- 중국 군사력 강화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과대 포장되하는 경향.

●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 및 양적 완화정책의 최종 결과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미국의 아시아회귀 정책에 편승하여 외교적 입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경향

- 보통국가화의 지속적 추진.
- 북·일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시도.

● 러시아의 경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실리추구적 접근을 가속화
- 북한의 구 소련 채무 90% 탕감(약 100억불 규모).
- 나진항 3호 부두 현대화 사업 및 나진-핫산 철로 개보수.
- 250억불 규모 북한내륙철도 현대화 '빠베다' 프로젝트 기획(3200km).
- 루스히드로, 극동과 남·북 연계 전력망 사업 예정.

● 오바마 정부는 이미 미국이 대서양 국가에서 태평양 국가로 전환했다고 선언하고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를 표방
- 문제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
- 라이샤워 명제가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전략의 핵심으로 지속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

● 일본과 미국 내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개정이나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 및 민주세력과의 연대 필요성
- "일본은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골칫거리"(뉴욕타임스, 2013.12.27, 아베 신사참배 비판기사).
- 미국과 중국은 적이 아니라 경쟁자라는 인식 필요.

● 미국의 아시아중시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미 양자동맹의 범위가 한반도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유의
- 미국의 주요 정책결정자와 관료, 전문가 들이 일본 보수진영의 시각으로 한국 및 아시아를 인식하는 경향을 방지.

● 민주주의와 인권이 가장 중요한 협력적 가치라는 점에 주목
- 한국 민주주의 발전이 한국의 동북아 전략 및 통일 추진에도 중요.

● 북한의 시장화와 민주화의 진전이 현실적 통일방안
- 대북 인도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
-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적극적 행보 필요.
- 대북한 주민 정책의 강화 및 북한 인권문제 해소를 위한 공동 노력 필요.

토 론 6

통일로 가는 길: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근 교수는 국제정치가 대중에 전달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명확한 메시지는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상상력의 빈곤을 어떻게 타대해야 하는지, 현실주의의 틀에 갇힌 경직성을 어떤 지혜로 돌파해 내는 것인지를 고민해왔고 이 글도 이런 연장에서 깊은 고민의 흔적을 읽을 수 있었다. 탁견이다.

○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인 쇠퇴로 인해 동아시아 국제정치가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세력전이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당분간 미중 간 잉여국력(surplus power)의 차원에서는 힘의 격차가 존재할 것이고 미국도 기준권력(default power)을 가지고 있다. 중국도 이러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도전하기 보다는 그동안 여기에서 이익을 얻었고 이 질서에 '만족하고' 있으며 당분간 이 질서와 연동해 중국의 부상을 기획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적어도 세계적 차원에서 미중 간 세력전이를 당분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중국의 현대사는 거시적 시각(후세의 시각)에서 보면 WTO 가입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의 미중관계 현실도 쟁점(flash point)에서는 갈등이 있지만 구조의 차원에서는 비교적 협력적이다. 신형대국관계가 매우 충돌하기 보다는 서로의 핵심이익을 놓고 조정해 나가는 긴 여정에 들어 선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은 공세적 현실주의를 추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경로의존의 모델이 없는 대국형 개방경제의 특성에 비추어 새로운 모색을 거듭하고 있다. 당분간 힘의 분포와 불만족의 변수를 근거로 미중 간 폭력적으로 세력전이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보다는 전쟁의 창과 평화의 창은 중국의 리더십, 국제질서의 구조, 국내정치, 정치적 수완(statemanship)등이 좌우할 것인데, 중국의 경우 평화의 창을 선택하면서 설사 세력전이가 나타나더라도 평화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도광양회(韜光養晦)와 유소작윈(有所作爲)는 대립항이나 진화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는 전략문화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동전의 양면으로 작동할 것이다.

○ 문제는 미국이 세계정치와 연동된 동아시아 지역에 투사할 힘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양상은 점차 미국이 이 지역에 투사할 힘의 한계(loss of strength gradient)를 나타내면서 세력전이가 아니라 지역전이

(regional transition)의 양상이 좀 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중국이 해양강국을 강화하고 주변지역에 힘을 투사하며, 미국은 미국대로 외주(outsourcing)과 다양한 지역동맹에 주력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판(plate)는 좀 더 중국에 경사되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 또 하나 중국의 길은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시장경제+다자주의)에서 이익을 얻기 보다는 새로운 질서의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주장하고 있고 중국적 담론력(discourse power)을 강화하고 중화국제화(sinic globalization)를 추구하며 '민주주의도 중국의 것이 좋다(우리가 보면 사변적으로 보이지만 선출보다는 선발, 민주주의를 해서 행복한가, 중국지도부의 meritocracy 등등 새로운 담론의 확장)'는 등 중국적 가치를 재해석하고 전파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이 질서가 시장과 다자주의를 포괄할 것이지만 복수의 근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새로운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중국적으로 규범화하고 역사적 경험과 정치문화를 수용하는 방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FTAAP와 TPP(중국에 대한 진입장벽), ADB와 AIIB(미국은 되고 중국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중국의 태도도 경제영토의 확장과 함께 일종의 담론경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북한이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또는 당국가체제의 정상화)하고 개방적 시장경제와 다자주의에 참여하는 이익이 크다는 시점과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점이다. 양보가 전제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인데, 누가 어떻게 양보하고 북한을 불러들일까 하는 점이다. 중국은 현재의 일당체제를 유가질서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민주화할 가능성이 크게 없다. 즉 역사적으로 형성된 문명형국가의 21세기 버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나아가 자국을 보호하려는 특수성으로부터 벗어나 매우 보편적인 현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북한의 경우도 중립화의 길을 통해 민족국가의 존립을 꾀하기 보다는 보다는 현재의 역사복합체(historical bloc)을 유지하면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매우 선택적으로 도입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닌가.

○ 무력으로 북한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편입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 불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을 싱가포르나 UAE식 개방으로 유도하고 국제정치적으로 스위스식 중립국 모델로 만드는 것은 권위주의적 지배 속에서 살고

있지만 밑으로부터의 동의, 대중독재, 자발적 복종(선거권위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있을 때 가능한 데, 북한의 경우 이러한 질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검증을 거친 중간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와 관련해 지금 북한에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보편화의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자연스럽게 등장했지만, 사라지기 어려운) 시장가격체제와 경제특구, 국경을 통한 경제협력(다른 나라와의 교역에서 → 국제적으로)현상을 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연동해 설명이 가능한가?

○ 우리는 지정학적 훈련, 지도를 그리는 힘(mapping power)이 취약하다. 이런 점에서 안에서 밖으로 구축되는 평화(peace built from the inside out)를 통해 세계사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규범적으로 옳고 정책수단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의(定義)가 필요하다. 중립화와 같은 거대담론이 아니더라도 지금 북핵문제의 핵심도 사실은 '비핵화'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에서 오는 것이다. 이런 점에 중립화로 가는 전 단계에서 '중립화'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져야 하고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선택은 주변 국가들의 행동준칙도 명확해져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비관론이지만, 현재의 체제에서 권위주의적 지배+시장의 활성화에 북핵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있는데 이 구조에서 북핵을 어떻게 분리해 내는가 하는 점, 이 과정에서 익힌 신뢰가 향후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핵심이 아닐까.

NOTES

NOTES

|2014 평화재단 창립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새로운 100년을 위한 출발, 새로운 통일을 위한 준비

통일패러다임을 구축한다

|2014 평화재단 창립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새로운 100년을 위한 출발, 새로운 통일을 위한 준비

통일패러다임을 구축한다